



주간 통일정세

2009-35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강원도 문천중 현지도(8/2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원도 원산시 바로 위의 문천시에 있는 문천중학교를 현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
 - 문천중학교는 고 김일성 주석이 정전직후인 1953년 10월 방문해 새 교사의 터를 잡아준 곳이어서 김 주석의 “수많은 혁명사적들”이 있는 곳이라고 통신은 설명, 김 위원장은 이 학교 현지도에서 “초등, 중등 교육단계에서부터 컴퓨터 교육을 강화해 재학기간에 컴퓨터를 원만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

- **김정일, 원산제염소 현지도(8/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원도의 원산제염소를 현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
 - 원산제염소에서 김 위원장은 “원산제염소, 광명성제염소를 비롯한 많은 제염소들이 일떠서고 그 위력이 충분히 발휘”돼 “소금 생산이 불가능하다던 동해안에 강력한 제염공업의 새 역사가 펼쳐졌다”고 말하고, 강원도가 “원산청년발전소와 제염소 건설을 비롯한 자연개조 사업과 전반적인 경제사업에서 최근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다”고 치하했다고 통신은 보도
 - 현지도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과 리철봉 책임비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박남기 노동당 부장 등이 수행

- **김정일, ‘5월11일제련소’ 현지도·공연관람(8/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로 개건 확장된 ‘5월11일제련소’를 현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
 - 통신은 김 위원장이 뮤지컬의 일종인 ‘노래이야기’ 공연을 관람했다고 이날 오후 5시께 보도한 후 2시간 만에 제련소를 현지도했다고 보도
 - 현지도에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 박남기 장성택 노동당 중앙위 부장, 김원홍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 등이 수행
 - 이에 앞서 통신은 김 위원장이 ‘우리 님 영웅되셨네’라는 제목의 노래이야기를 김기남 노동당 비서, 노동당 부장 및 1부부장들, 김원홍,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 등 외에 리철봉 노동당 강원도위원회 책임비서와 함께 관람했다고 보도

● 北조문단이 전한 김정일 건강(8/24, 연합)

- 김기남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관한 무소속 정동영 의원의 질문에 “올해는 작년에 비해 4배나 현지 지도(현지시찰)를 많이 하셨다”며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현정은 현대 회장이 와서 확인하지 않았느냐. 건강하시다”라고 답했다고 정 의원이 전언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김 비서가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클린턴 대통령과 현정은 회장이 봤으니까 제3자들이 본 객관적 상황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김 위원장이) 정신력으로 (건강약화를) 극복했다”고 얘기했다고 24일 아침 출연한 라디오방송에서 소개

나. 정치 관련

● 조선신보, 정부차원서도 北이 내민손 잡아(8/2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8일 ‘금강산에서 확인하는 수뇌합의 정신,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의 해결 방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과 북한 특사조문단의 방남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상대가 내밀었던 손을 맞잡아야 전반적인 북남관계가 발전의 궤도에 들어설 수 있다”고 주장
- 조선신보는 이날 북측 적십자 관계자들이 26-28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적십자회담 내내 “불신과 대결의 낡은 관념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민족화해와 공동번영을 위해 손잡고 나아갈 것을 호소했다”고 보도
- 신문은 특히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데 “수뇌합의 들(6.15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실용정부’의 태도와 이행 의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며 “아직은 가시적인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 “관심이 있는 정부라면 결론은 저절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
- 신문은 이명박 정부 들어 “상봉행사가 한번도 진행되지 않았던 현실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북남선언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거듭 두 문제의 연계성을 강조
- 신문은 한편 김정일 위원장의 현정은 회담 면담, 특사조문단의 서울 파견 등을 들어 “북의 주동적인 조치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북한의 주동성을 강조



- **北매체, 이산가족 추석 상봉 합의 보도(8/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오후 남북이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추석 상봉행사를 갖기로 한 사실을 비교적 신속하게 보도, 중앙통신은 “북남적십자회담이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며 “회담에서 쌍방은 이번 추석을 계기로 진행할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사이에 하기로 하고 그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에 합의하였다”고 보도
 - 통신은 “또한 북과 남은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 등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를 북남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힘.

- **北매체들 대남 논조 변화(8/28, 조선신보)**

 - 최근 북한 언론매체들의 “대남논조에서는 일정한 변화가 감지”된다고 조선신보가 28일 보도, 신문은 ‘대일 논조는 강경 일변도, 총리의 실명 올려 강도 높게 비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8월 한달간 북한 언론매체들의 논조를 개관하면서 “특히 남조선에 대하여는 이제까지 ‘리명박 역도’, ‘역적패당’ 등의 표현으로 리명박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여왔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북측 조문단 면담 “이후에는 그러한 단어가 자취를 감추는 등” 변화가 감지된다고 설명
 - 그러나 “대일논조는 강경 일변도”라며 “언론들은 일본 총리의 실명을 직접 올려 규탄”하는 등 “한마디로 일본에 대해서는 유화 자세를 일체 안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대조점을 분석

- **노동신문, 청년들은 수뇌부옹위 결사대(8/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청년절’을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수령 결사옹위” 정신을 강조하면서 모든 청년들에게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
 - 신문은 ‘강성대국 건설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전투적 기개를 높이 떨치자’는 제목의 청년절 기념 사설에서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인 청년들이 기세를 올리고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 제껴야 온 나라에 필승의 기상이 차넘치고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문

- **조선신보, 상봉행사, 이명박정부 남북선언 첫 이행과정(8/27, 조선신보)**

 -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 북측 대표단장인 최성익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회담 첫날 기조발언에서 이번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명박 정권 출범 후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계기점”이자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의 첫 이행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신보가 27일 보도



- **노동신문, 美에 대북정책 전환 요구(8/26,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26일 미국에 대해 “우리가 일시적인 경제적 난관을 겪고 있는 것을 조선침략의 좋은 기회”로 보고 “제재소동”과 “무력공갈”을 펴고 있다고 비난
 - 신문은 ‘호전광들은 분별있게 처신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또 “미국은 저들(자신들)의 군사적 우위를 믿고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면 무력을 행사한다는 식으로 고압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만약 미제가 또 다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핵무기를 포함한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총동원하여 천백배의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이날 또 ‘핵 선제공격을 북침전쟁 전략으로 내세우고’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선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적 패권 장악을 위해 “핵 선제공격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을 “기본과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힘의 방법에 의한 대조선(대북) 침략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신문은 한미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에 대해 “미국은 말로는 북침 의사가 없다느니 뭐니 하고 평화 타령을 곧잘 하지만 실지로는 핵 선제 공격수법에 의한 대조선 압살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

- **北, 민주콩고 대사에 리명철 임명(8/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콩고 민주공화국(민주콩고) 주재 대사로 리명철을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
 - 리 대사는 외무성 연구원, 가나주재 북한대사관 1등서기관을 지낸 것 외엔 자세히 알려지지 않음.
 - 북한은 민주콩고와 1972년 12월 15일 수교했으며 경제과학기술협정, 문화협조협정, 무역협정, 정부간 공동위 창설합의서 등을 체결

- **장성택 형 장성우 軍차수 사망(8/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형으로 북한군 차수(원수와 대장 사이의 계급)인 장성우(76)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
 - 통신은 김정일 위원장이 “장성우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5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시었다”고 전했으나 그의 사망 일시나 사인 등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음.
 - 1933년생인 장성우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했으며 6.25전쟁 때 인민군 중대장으로 참전해 낙동강까지 다녀온 북한의 ‘혁명 2세대’임. 1988년 인민무력부 경찰국장, 1991년 사회안전부 정치부장, 1992년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등 인민무력부와 사회안전부에서 경찰과 정치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1995년 호위총국장에 임명되었음.



- 1983년 미얀마(옛 버마) ‘랭군 폭파 테러’ 사건의 총지휘 책임자로 알려져 있으며, 김정일 위원장이 1987년께 자신이 타던 승용차를 선물할 정도로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짐. 그의 동생이자 장성택 부장의 형인 장성길 북한군 중장(우리의 소장급)은 지난 2006년 사망

● 평양시민들, 조문단 **李대통령** 면담 ‘참 잘됐다’(8/25, 조선신보)

- 북한의 특사 조의방문단이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를 토의했다는 소식에 ‘평양시민들’은 “참 잘됐다”는 반응이라고 조선신보가 25일 보도
- 조선신보는 “특사 조의방문단의 파견 소식은 며칠동안 평양에서도 관심사”였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평양시민들’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을 통해 “북남 관계개선의 돌파구”가 열리는 등의 “일련의 사태 진전에 드놀지(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보고 있었다”고 설명
- 조선신보는 이어 특사조의단의 이 대통령 면담이라는 “갑작스러운 국면전환에도 평양시민들은 별로 당황하는 기색이 없다”고 말하고 이들은 “모든 것이 다 장군님(김정일)의 뜻이다”라며 김 위원장의 “결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
- 신문은 또 남측에선 현정은 회장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 이후 흐름을 “통민봉관으로 규정하며 여론을 오도”했으나 “북측에는 오늘의 사태 진전을 긴장완화를 위한 일과성의 변화로 보는 관점은 없다”고 말하고 “조선반도(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크게 전환돼 가고 있다”며 “특사조문방문단의 청와대 방문을 계기로 이제는 ‘되돌리지 않는 변화가’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

● **北총참모장, 제재에는 무자비한 보복(8/24,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군 총참모장인 리영호 대장은 24일 “제재에는 무자비한 보복으로, 대결에는 전면대결로 대답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 그는 이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 영도’ 49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미제와 남조선 호전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을 기습 선제타격하기 위한 을지 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았다”며 “우리가 강력한 자위적 핵억제력을 마련해 놓은 것이 천만번 정당했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확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
- 또 그는 경제문제와 관련, “금속공업의 선차적 발전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중요부문들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는데 힘을 집중하여 전반적 인민경제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해야 한다”며 “당의 농업혁명방침, 경공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자체로 원만히 해결하고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보장함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인 전변”을 이룩할 것을 요구

다. 경제 관련

● 김정일, 평양을 더욱 웅장·화려하게(8/28, 조선중앙방송; 9월호, 조국)

- 조선중앙방송은 최근 수년간 대대적인 평양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1년 8월 28일 발표한 ‘평양시를 현대적인 도시로 보수 개건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담화’에 따른 것이라고 소개
- 북한 내각 수도건설부의 김경모 국장은 이날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당시 김 위원장이 “평양시의 면모를 일신시키자면 건물과 시설물들을 보수 개건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 봉사망들을 꾸리는 사업을 잘 하며 건물 장식도 품을 들여 손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은 또 건물과 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외장재 문제, 도로명 개칭 등의 대책도 내놓았으며,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리려는 김 위원장의 구상에 따라 “지금 평양시에서는 타일붙이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김 국장은 설명
- ‘조국’ 9월호는 ‘평양 리모델링’과 관련, 북한 당국이 “2012년을 목표로 여러 개의 기본 거리들을 새로 형성”하고 “10만 세대의 살림집들을 건설”할 것이라고 보도

● 김정일, 목표는 높고 시간은 짧다(8/28,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강성대국’ 달성 목표 해인 오는 2012년까지는 “뗏해밖에 남지 않았다”며 “선전, 선동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중의 정신력을 총동원, 총발동”해 나갈 것을 당·군·국가경제기관 간부들에게 주문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8일 보도
- 그는 지난 6월 25일 이들 간부를 모아놓고 ‘김일성 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라는 제목으로 한 담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중앙방송이 담화 닷새째분을 통해 소개
- 김 위원장은 이날 소개된 담화에서 2012년까지 “점령해야 할 목표는 비상히 높고 주어진 기간은 짧지만” 올해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거듭 주문,
- 그는 올해를 “분수령이 되는 관건적인 해”라거나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좌우하게 될 참으로 중요한 해”라고 규정하고 올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야 “당 창건 65돌이 되는 다음 해에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군대, 당원, 청년, “혁명의 지휘 성원인 우리 일군(간부)들”이 앞장 설 것을 그는 요구



● **재개발 들어간 금강산 온정리마을(8/28, 연합)**

- 금강산 관광지 인근 온정리 마을이 재개발 사업에 들어갔음. 그동안 관광객들의 시선을 감안, 콘크리트 담 등을 설치해 외부와 차단해왔지만 이번에는 과거 있던 가옥들을 해체한 뒤 새롭게 건설, 새로 건설되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3층으로 이뤄졌으며 일부 건물은 외부 공사에 이어 기와를 얹는 작업까지 마치고 내부공사에 들어간 곳도 있음.
- 북측은 2008년 10월 온정리 마을 주민들을 모두 이주시키고 주택철거 작업에 들어갔으며 11월에는 견본주택부터 시공에 들어갔다는 후문, 올해 1~2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했다가 3월 공사를 재개, 대부분의 건물 외벽공사를 완료, 재개발 지역의 총 인구는 1천200세대 5천명으로, 재개발 면적은 19만9천여㎡이며 원래대로 보존되는 지역은 2만3천㎡의 학교뿐임.
- 현대아산 관계자는 28일 “북측은 ‘사회주의 선경(仙景)’을 조성해 온정리를 북한 내 최고 마을로 꾸민다는 계획으로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언급
- 건물들이 올해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완공되면 입주민들은 대부분 금강산의 현대아산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로 채워질 것으로 알려짐. 북한이 온정리 마을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면서 작년 7월 남측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돼 일 자리를 잃게 된 현대아산 사업장의 북측 종업원들이 재개발 사업에 대거 동원된 것으로 알려짐.

● **北, 자금난에 ‘장롱달러’ 유통대책 부심(2009년 2월호,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월호는 ‘은행의 역할을 높여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경리를 바로 운영하도록 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언급하며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휴화폐 자금을 최대한 동원”할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은행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촉구
- 이 학보는 “은행의 역할을 높여 자금유통 사업을 잘 하는 것은 나라의 중요한 재정 예비의 하나인 유휴화폐 자금을 최대한 동원하여 다른 나라의 원조나 차관에 의거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국가재정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라고 설명
- 김일성대 학보는 특히 은행의 ‘자금유통 사업’ 강화책으로 “저금형태와 대부형태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세분 확대”해 “신용사업을 적극 벌여” 나갈 것을 주장, “은행과 기업소, 주민사이의 신용거래가 다양하게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해 저금과 대부 “형태를 현실에 맞게 다양하게 설정하여야 저금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관, 기업소들의 모자라는 자금의 특성에 맞게 대부를 올바르게 조직할 수 있다”는 것임.



-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은행에 저축하면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이자 등의 문제로 인해 거액 보유자일수록 저축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北, 해삼 2t은 알곡 100t 생산 효과(8/23, 노동신문)**

-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의 박진길 교수(박사)는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식량난 해결 대책으로 재배어업의 중요성을 강조, 그는 “해삼을 양식해 정보(1ha. 약3천평)당 2t이상 거둬들이면 알곡 100t 이상을 생산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
- 그에 따르면 북한에선 개간된 간석지나 바닷가에 건설한 양식못에 바닷물을 순환시키면서 큰 새우, 만밥조개, 해파리, 참게 등을 기르고 있으며 “특히 해삼 양식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

● **김정일, 주공전선은 경제전선(8/27,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는 2012년 강성대국 달성을 위한 “주공전선은 경제 전선”이라며 “모든 부문에서 최고 생산년도 수준을 강행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록,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것을 주문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보도
- 그는 지난 6월 25일 당·군·국가경제기관의 간부들을 모아놓고 ‘김일성 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라는 제목으로 한 담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방공업을 최우선시”할 것을 강조했다고 중앙방송이 담화 나흘째분을 통해 소개
- 그는 국방공업에 이어 금속, 전력, 석탄공업과 철도운수 등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4대부문 중에서도 “급선무로 나서는 것은 금속공업 부문을 치켜세우는 것”이라고 제시
- 그는 자신이 국제노동절인 5.1절에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이들과 연관된 금속공업분야 노동자들을 평양으로 초청, 각종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대규모 ‘축포야회’를 보여준 것도 “경제강국 건설의 기본열쇠를 쥐고 있는” 이 부문 노동자들을 고무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
- 이어 전력부문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에 “선차적인 힘”을 넣을 것을 주문하면서 희발발전소를 2012년까지 반드시 완공하고 금야강발전소, 예성강발전소,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어랑천발전소 등 다른 대규모 발전소의 건설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

● **김정일, 유엔 제재기간 고급차 계속 수입(8/26, 日 지지통신)**

- 김정일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에 의해 고급차를 포함한 사치품 대북 수출이 금지됐음에도 여전히 고급차 수십대를 몰래 수입한데 이어 올해도 벤츠 등의 구입을 추진하고



-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6일 북한 문제에 정통한 일본 내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500여대의 개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경호 등의 목적으로 매년 차량 구입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조치 이후인 2007년에는 영국산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10여대를 구입한 바 있고, 2008년에도 벤츠 600 등 승용차 20여대를 수입
 - 김 위원장은 2009년에도 벤츠 승용차와 버스 구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입 금액은 무려 수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대북 수출 제재를 피하고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매자를 중국 회사로 위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또 지난해 건강이상설이 퍼지기 전후부터는 유럽에서 수백억원대의 X레이 기기 등 최신 검사 장비와 응급 헬기를 도입하기 위해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장비를 도입하는데도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중·단거리 미사일 18기 발사 및 5월 25일의 2차 핵실험에 최소 6억 달러에서 최대 9억 달러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
- **김정일, 위에서 못 대주니 자력갱생하라(8/26,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도 많고 없는 것도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남에게 의존하여 풀어나갈 수는 없다”며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를 더 높이” 들 것을 북한의 당·군·국가경제기관 간부들에게 강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6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25일 이들 간부를 모아놓고 ‘김일성 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라는 제목으로 한 담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중앙방송이 그 담화 사흘째분을 소개
- **김정일, 6월 25일에 ‘경제 담화’(8/24,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6월 25일 노동당과 군대, 국가경제기관 간부들을 모아놓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자”고 드라이브를 거는 담화를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개월여 뒤인 24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당 군대 국가경제기관 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만드는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필생의 염원이었다”며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활짝 열자면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거세찬 폭풍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



● **北, 석탄 수출 전면 금지(8/24, 연합뉴스)**

- 북한이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무연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나선 것은 기간산업 정상화를 위한 고육지책인 것으로 보임. 9월 17일 종료되는 150일 전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삼남 김정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막바지에 접어든 150일 전투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간산업 정상화가 선결 요건이고 이를 위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무연탄 확보가 시급한 형편
-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주로 5천500cal/kg 이상의 고품질 무연탄을 수출해왔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화력발전소에 공급되는 무연탄은 3천500-5천cal/kl의 저질인데다 이마저도 제때 공급되지 않아 전력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왔음. 이 때문에 북한의 주요 광산과 생산시설에 공급되는 전력이 하루 12-13시간에 불과하고 전압도 불안정해 광산과 공장 가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 7월 초 김영일 총리 주재로 열린 하반기 경제운용을 위한 북한의 내각회의에서는 전력난 해소 방안이 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발전소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내각에 지시

● **北도 ‘녹색제품’, ‘녹색장벽’에 눈들려(2009년 2호,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제2호는 “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환경관리 체계에 따르는 녹색장벽을 통하여 제품 개발과 생산, 이용 과정에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의 적용과 함께 그 제품의 생산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녹색제품을 더 많이 설계하고 개발하는 나라가 국제시장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분야 종사자들에게 녹색장벽의 “본질과 특성을 정확히” 알고, “환경보호 사업을 더욱 다그치고 대외무역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

라. 군사 관련

● **이란 미사일기술, 北 추월(8/28, 미국의소리 방송)**

-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전수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최근 북한보다 더 발전했으며 이로 인해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역전수’되거나 이란의 미사일 기술과 북한의 핵기술이 결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28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우지 루빈 전 이스라엘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은 최근 발표한 ‘이란 미사일 능력의 새로운 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실패한 반면 이란은 2월 로켓 발사에 성공한 사실 등을 들어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을 능가한다고 분석
- 루빈 전 국장은 북한은 3단계 발사체 기술을 도입했고 장비들도 매우 크고 무거웠던 반면 이란은 자체 기술로 가벼운 2단 로켓 ‘사피르 2호’를 우주궤도에 진입시켰다고 지적, 또 이란은 지난 5월 고체 추진 기관을 사용하는 사거리 2천km의 지대지 중거리 미사일 ‘세질 2호’의 시험발사에 성공했지만 북한은 고체 연료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 적이 없다고 설명
- 미국의 ‘글로벌 시큐리티’의 찰스 빅 선임연구원도 이란이 보유한 미사일의 고체연료 추진기술을 북한이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면서 “이란과 북한은 이미 액체추진 로켓 기술을 공유한 만큼 앞으로 고체추진 기술이 북한에 전수돼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주장
- 그레그 킬먼 전 미 국무부 전략무기비확산담당국장 역시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보다 앞섰다는 평가에 동의하면서 “북한의 노동 미사일은 시험발사 성공 한번 만에 실전배치됐지만 이를 본떠 만든 이란의 ‘샤하브 3호’는 여러차례 시험발사 이후 배치돼 성능이 훨씬 안정적인 것”이라고 주장
- 그는 또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전수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매우 우려”한다고 말하고, 특히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전수될 경우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며, 북한과 이란이 핵관련 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맞교환할 가능성도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고 부언

마. 사회·문화 관련

● ‘요덕’ 보다 무시무시한 ‘전거리노동교화소’(8/29, 조선일보)

-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5월 초 “한 명의 탈북도 허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고 뒤 대대적인 탈북자 때려잡기가 시작, 국방위 명령은 핵실험 뒤 국제사회의 압력이 시작되자 대량 탈북 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알려짐.
- 국방위는 주민 강연도 대대적으로 개최, 골자는 “말로 탈북자를 통제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무단으로 건너면 ‘민족반역자’로 간주하겠다”는 내용, 그 뒤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개함경북도 전거리의 ‘전거리노동교화소’임. 이 교화소가 탈북자 전용 수용소로 개편됐으며 일반 교화소보다 노동 강도가 훨씬 세고 고문 구타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곳으로 악명이 높아짐.
- 최근 전거리 교화소에서 출소한 탈북자는 “탈북자 전용으로 바뀌면서 탈북자들이 무리로 죽어나가고 있다”고 주장, 그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 미처 시체를 치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

- 북한은 국경을 넘은 자들은 남한행이나 기독교를 접하지 않았어도 ‘민족반역죄’로 다스리라는 지시에 따라 무조건 3년 이하의 교화형을 받아 전거리 교화소에서 강제노역에 처하고 있음. 강은 건너지 않아도 압록강이나 두만강가에 이유없이 접근하다 단속에 걸려든 자까지도 탈출기도자로 몰아 교화소에 수감시키는 통에 북-중 국경 북측의 강변에는 군인들 외에는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며 그 밖에 중국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외부와 연계하는 자들도 탈북자 수준의 처벌을 받고 전거리로 끌려가고 있음.

● **北 중부 일부 최근 300mm 이상 폭우(8/28, 조선중앙TV)**

- 최근 북한 황해북도 토산군을 비롯해 중부 일부 지역에서 300mm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
- 중앙TV는 최근 북한 기상의 특징으로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 많은 비와 폭우가 내린 것”을 들고 황북 토산 346mm, 강원도 철원 331mm를 비롯해 황북 금천 259, 름산 251, 신계 244, 서흥 238, 평산 223, 황남 신원 243, 신천 222, 장연 219, 강원도 이천 234, 평강 207mm였다고 보도

● **北세밀화 대가, 선우영 사망(8/15, 문학신문)**

- 북한 ‘김일성상’ 계관인이며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은 화가 선우영이 지난 7일 62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문학신문이 15일 보도
- 선우영은 60여점의 작품이 북한의 국보로 지정될 정도로 북한의 최고의 화가로 꼽히며 세화기법을 위주로 한 주제화, 풍경화 등에서 “진지하고 섬세하며 생동적인 화풍”으로 ‘진채세화의 대가’라는 명성을 얻었음.

2. 대외정세

가. 유엔안보리제재 관련

● **北선박 UAE 억류, 유엔 결의후 첫 제재(8/29, 연합)**

- 아랍에미리트(UAE)가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을 억류한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후 금수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에 대한 첫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 이행이라는 점에서 주목, 이번 UAE의 선박 억류 조치는 실제 불법무기를 선적한 선박에 대해 검색을 실시해 불법 무기를 확인하고 이를 안보리에 통보, 결의 1874호의 의심 선박에 대해 공해상에서도 기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즉각 안보리 제재위에 통보토록 규정한 조치를 그대로 이행했다는 점이 특징



-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는 “수주일 전에 북한 선박이 UAE에 의해 억류됐으며, 선박에는 금수 품목인 로켓 추진 폭탄 등이 선적돼 있었고, 이 무기들의 포장에는 ‘기계 부품’이라는 가짜 라벨이 붙어 있었다”고 보도해 UAE 당국이 이미 충분히 조사를 완료했음을 시사

● 골드버그, 개성·금강산, 유엔제재와 무관(8/24, 연합)

- 필립 골드버그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4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합의한 금강산·개성관광재개 및 개성공단 활성화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무관하다고 밝힘.
-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날 오전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리 결의 1874호도 인도주의, 개발 목적 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금강산이나 개성관광, 개성공단 등도 현재로서는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다는 게 내 평가”라고 언급
- 골드버그 조정관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유화적 제스처에 대해 “안보리 제재의 이행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규정한 뒤 안보리 결의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제재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 골드버그 조정관은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의 달성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것이 안보리 결의의 목적”이라며 “핵개발 등과 관련한 북한 기업·기관에 대한 금융제재를 비롯한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설명
- 그는 또 ‘북·미 양자대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북·미 대화가 앞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양자대화가 있더라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아직 바라는 것”이라고 답변

나. 북·미 관계

● 北정부관계자, 8월 중순 비밀리에 방미(8/28, 미국의소리 방송)

- 북한의 대외 유화적 제스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정부 인사 4명이 이달 중순 미국을 비밀리에 방문한 것으로 27일 알려짐. 이들의 방문은 조(북).미 민간교류협회(KAPES) 대표단이라는 민간 차원의 방미 형식으로 8월 15-19일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짐.
-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민간 초청으로 북한 인사들이 최근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들은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대북지원 관계자 등과 만났다”고 전언, 이 소식통은 “이들의 방미는 미국 정부의 초청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방미 대표단은 모두 북한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미국 정부로부터 비자를 받았다”고 언급



- 방미 대표단에는 최일 조미 민간교류협회 부회장과 협회소속 고위 관료, 통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도 이들의 방미 일정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짐. 구체적인 방미 목적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북 식량지원 재개 등의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대표단은 방미 기간인 지난 1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오퍼레이션USA’를 비롯한 미국의 구호단체 관계자들과 만났으며, 특히 오퍼레이션 USA의 식량, 의약품 저장 창고 등도 둘러본 것으로 알려져 대북 식량지원 재개 여부가 주목됨. 이번 북한 대표단의 방미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초 방북, 한국계 유나 리를 포함한 미국 국적 여기자 2명의 석방 교섭을 벌인 직후 이뤄진 것으로 두 사안의 상관 여부가 주목
- 외교 소식통은 “북 대표단의 방미 기간에 미국 정부와 이들간의 직접 접촉은 없었다”면서 “말은 민간 교류지만, 미국이 북한을 조금 풀어주려는 것 같다”고 언급.
- 한편 북한 대표단은 방미 기간에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과도 만나 어린이들을 위한 두유 공급, 밀가루와 콩 지원 등의 사업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으며, 황해북도에서 이동식 식수 공급사업도 시작으로 합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

● 北 6자회담 복귀해야 보즈워스 방북(8/25, 미 국무부)

- 미 국무부는 25일 공식적으로 “스티븐 보즈워스(Bosworth) 특별 대표단, 성 김 6자회담 대표단 현재로선 방북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북한측이 우선 ‘6자회담 복귀·비핵화 이행’이라는 기본 원칙을 동의할 것을 재차 강조, 북한은 이에 앞서 보즈워스를 초청하고, 빌 리처드슨(Richardson) 뉴멕시코 주지사를 통해서도 대화를 요청했음.

다. 북·중 관계

● 中방송사, 北 영상물 제작했다 혼쫓(8/30,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 중국 상하이미디어그룹(SMG)이 북한 사회를 조망하는 영상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영했다 북한측으로부터 체제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켰다는 항의를 받고 곤경에 빠졌음.
- 지난 7월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SMG이 북한측의 분노를 사 회사 경영진과 주요 간부들이 해임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30일 중국 언론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
- 중국 관영 중앙(CC)TV에 이어 중국 제2의 언론 그룹인 SMG는 다큐멘터리 채널을 통해 지난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북한 직접 들여다보기’라는 제목의 영상 다큐멘터리를 방영



- 이에 앞서 SMG 제작진은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지난 6월 열흘 가량 북한에 머물면서 촬영
 - 그러나 북한 당국은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이후 “SMG가 북한사회의 어두운 면을 강조했다”고 비판한 뒤 외교채널을 통해 베이징 당국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전언, 북한이 문제로 삼은 영상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150일 전투’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짐. 북한측의 항의를 받은 베이징 언론 당국은 8월 초 리루이강(黎瑞剛) 총재를 포함해 경영진과 간부진들을 베이징으로 소환해 다큐멘터리 제작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짐.
 - 중국의 언론사가 북한측의 분노를 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님. 지난 2004년 베이징의 정치·경제관련 잡지인 ‘전략과 관리’라는 잡지는 북한의 권위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폐간된 바 있음.
- **北경제무역대표단, 中박람회 참가(8/29, 평양방송)**
 - 북한의 경제무역대표단(단장 구본태 무역성 부상)이 중국 창춘에서 열리는 제5차 지린동북아시아투자무역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29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 **中, 北 준수시 제재중단·해제 검토해야(8,28, 미국의소리 방송)**
 -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874호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과정이 북한의 정상적인 대외관계를 해쳐서는 안되며, 북한이 이 결의를 준수할 경우 제재의 “일시적인 중단이나 해제”를 검토할 것을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28일 보도
 - 중국은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에 최근 제출한 ‘1874호 이행 국가보고서’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와 제재위원회의 관련 결정을 정확하고 진지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중국도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나 “안보리 결의 이행이 북한의 국가 발전이나 정상적인 대외 접촉, 북한 일반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북한의 다른 나라들과의 정상적인 대외관계를 해쳐서도 안된다”고 강조, 또 “제재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확대해서는 안되며 군사력에 대한 의존이나 군사력 사용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 중국은 특히 “만일 북한이 대북 결의 규정을 준수할 경우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일시적인 중단이나 해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VOA는 보도



● **北, 中 단동에 영사지부 정식 개설(8/26, 연합)**

- 북한이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의 단둥(丹東)에 주선양(瀋陽) 단둥 영사지부를 정식 개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음.
- 26일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25일 오전 이기범 주선양 북한 총영사 등 중국 주재 북한 관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테이프 커팅 등 단둥 영사지부 개소식 행사를 개최, 개소식 행사에는 단둥시 등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들도 참석
- 단둥 지아디(佳地)광장 A좌 21층에 마련된 북한의 단둥 영사지부에는 영사급을 포함, 2명이 배치돼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 단둥 영사지부는 그동안 선양에서 처리했던 단둥지역 비자 발급 업무 등을 담당
- 규모는 작지만 단동에 외국의 공식 외교 공관이 들어선 것은 북한 영사지부가 처음임. 연간 20여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중간 교역물자의 70% 이상이 오가는 단둥은 북한의 전략적 대외무역 요충지임.

라. 북·러 관계

● **러, 北 핵·미사일실험 대비 방공망 배치(8/26, 연합)**

-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실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실험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대비, 극동 지역에 최신 방공망을 배치했다고 니콜라이 마카로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26일 밝힘.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 중인 마카로프 총참모장은 “우리는 그 곳(극동 지역)에 S-400 사단을 두고 있다”면서 북한 국경 인근에 최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한 상태라고 언급

3. 대남정세

● **연안호 귀환(8/29, 연합)**

- 7월 30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갔다가 북한 경비정에 예인됐던 강원 고성 거진항 선적 ‘800 연안호’의 선원 4명과 선박이 29일 무사히 속초항에 도착, 연안호와 선원 4명은 29일 오후 5시 고성군 저진 북동방 16마일 지점(북위 38도 37분, 동경 128도 44분) NLL 상에서 북측으로부터 해경 경비정에 인계됐으며 오후 8시 25분께 속초항으로 귀환
- 속초해경 등 관계 기관으로 이뤄진 조사단은 선원들의 건강과 선박의 이상 여부를 선상에서 1차 확인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짐. 오징어 채낚기어선 ‘800 연안호(29t급)’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 5분께 GPS(위성항법장치) 고장으로 제진(옛 저진) 동북쪽 37km 상의 NLL을 13km가량 넘어갔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장전항으로 예인됐었음.



● 남북, 9월26일-10월1일 상봉 합의(8/28, 연합)

- 남북은 28일 끝난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추석 상봉행사를 내달 26일부터 10월1일까지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함으로써 지난 2007년 10월 이래 중단됐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년만에 재개되게 됐다.
-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발표한 합의서에서 또 제2항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 등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앞으로 적십자회담을 계속 개최할 것임을 시사
- 또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 의제를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남측이 이번 회담에서 제기한 남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비롯해 앞으로 북측이 남측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식량 등의 지원문제 등도 다룰 여지를 남겼음.
-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의 “새로운 해결” 방식과 추가 상봉 문제를 합의문에 명시할 것을 주장했으나 북측이 이번 회담은 “추석 상봉에 국한”된 것이라며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이들 문제는 합의문에 담기지는 못했음.
- 이에 대해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주로 한 것이어서 국군포로 문제 등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유연한 입장을 취하게 됐다”고 설명
- 남측은 회담에서 이산가족 교류사업은 어떠한 정치적 사안에도 불구하고 추진돼야 한다는 인도주의 존중 원칙, 전면적 생사확인·상시 상봉·영상편지 교환·고향방문 등으로 일회성 상봉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추구하자는 원칙, 남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상호협력의 원칙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3대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회담들에서도 이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됨.
- 합의서에 따르면, 9월 26~28일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이 금강산에 가서 북측 가족 약 200명과 만나고, 이어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이 금강산에서 약 450명가량의 남측 가족과 만나게 됨.

● 남아공 월드컵 남북 공동 응원 추진(8/28, 연합)

- 2009년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대회 때 남북한이 공동 응원에 나서는 방안이 추진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교류협력 사업 점검을 위해 남아공을 방문 중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대표단은 27일 “남북한이 나란히 남아공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만큼 월드컵 무대를 남북 화해 및 협력을 위한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통일부, 대북 인도적 지원 시작할 것(8/27, 연합)**
 -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개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질문에 대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변
 - 그는 인도적 지원 절차에 대해선 “유엔기관을 통해 지원하되, 북한의 영유아나 질병에 대해선 민간기관을 통해서도 지원하겠다”고 답했지만, 지원재개 시점은 밝히지 않음.
 - 그는 최근 북한 조문사절단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해선 “남북정상회담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 “조문단은 조의를 표명하러 왔고, 사전에 남북 당국자와 협의가 없었다”며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힘.
 - 현 장관은 또 북한 억류 136일만에 석방된 현대아산 개성공단 주재원 유성진씨에 대해선 “석방 대가는 없었다”고 답변

- **경기도, 北, 산업단지 조성 참여 제안(8/27, 연합)**
 - 경기도는 최근 남북교류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평양 인근 스포츠용품 산업단지(33만㎡) 조성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 받았다고 27일 발표
 - 도는 제안 검토를 위해 조만간 민간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방북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통일부에 방북 승인을 요청, 방북단은 현지를 돌아보며 사업 타당성 등을 파악하는 한편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북한내 양묘장 운영, 양돈단지 조성, 벼농사 협력 등 사업을 재개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음.

- **유성진씨, 일부 합의위반·北강압조사(8/25, 연합)**
 - 정부는 지난 13일 북한에 억류된지 136일 만에 석방된 현대아산의 개성공단 주재원 유성진(44)씨가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것은 사실로 파악됐다고 25일 발표, 그러나 정부는 유씨가 장기간 억류된 채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혐의 내용에 대해 시인 취지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

- **판문점 남북직통전화 재연결(8/25, 연합)**
 - 통일부는 25일 북측이 작년 11월 이후 단절한 판문점 남북 당국간 직통전화 채널(적십자 채널)이 이날부로 복원됐다고 밝힘.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측은 오늘 오전 9시 47분 판문점 직통전화 채널로 보내온 통지문에서 ‘북측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들이 정상적인 사업에 착수했다’고 통지해왔다”며 “이로써 남북적십자간에 직통전화 연락채널이 정상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



〈별첨1〉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전문

남북은 28일 적십자회담 마지막 날 회의를 열어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상호 100명씩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고 특히 단체상봉은 금강산이산가족 면회소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남북은 2009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① 상봉규모는 남과 북이 각각 100명씩 하기로 한다.
 - ② 생사확인회차서는 9월 1일 쌍방이 각기 200명씩, 회보서는 9월 15일, 최종명단 100명은 9월 17일에 교환한다.
 - ③ 상봉 장소는 단체상봉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개별상봉은 금강산호텔 등 기존 시설에서 하기로 한다.
 - ④ 쌍방은 상봉의 원만한 보장을 위해 선발대사업을 상봉시작 5일 전부터 진행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 등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2009년 8월 28일

남북적십자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김영철,
북남적십자회담 북측대표단 단 장 최성익』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호주 “금지무기 선적 호주선박 사법처리”(8/30)

- 호주 연방정부는 북한제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가던중 아랍에미리트(UAE) 세관당국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호주 회사 명의의 선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사법처리하기로 했음.
- 앤서니 알바니즈 연방정부 교통부장관은 30일 한 방송에 출연, “바하마 선적의 문제의 선박이 현재 UAE 세관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만일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해당 회사에 대해 관련 사법당국이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호주 AAP통신이 전했다.
- 알바니즈 장관은 “호주는 북한의 무기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명확히 준수하고 있다”며 “호주 회사들은 호주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호주 외교통상부가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향후 취해야 할 조치는 문제의 선박이 호주 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에 앞서 호주 외교통상부는 지난 29일 UAE 세관당국이 수주전 바하마 선적 호주 회사 명의의 ‘ANL 오스트레일리아’호를 나포해 적재돼 있던 다수의 컨테이너를 하역조치한 뒤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무기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확인했음. 문제의 선박에는 로켓 폭탄 등 다량의 북한제 무기가 적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의 무기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한 1874호 발효이후 북한제 무기를 옮기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임.

● 北무기 UAE 압류, 유엔결의 첫 이행(8/29)

-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으로 향하던 제3국 선박에서 북한의 무기를 압류한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후 북한의 무기 수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첫 번째 제재 조치 이행이라는 점에서 주목됨.
-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채택된 결의에 따라 제재위는 지난 7월 16일 북핵 및 미사일 발사에 깊이 관련된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등 5명의 개인에 대한 여행 금지, 해외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확정했음. 또한 원자력 총국 산하 핵 프로그램 담당 기업인 남천강 무역회사, 원자력 총국 등 5개 기업과 기관, 미사일 제조 등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 등 2개 물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취한 바



있음. 앞서 지난 6월 말에는 불법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 강남1호가 미얀마로 추정되는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다 미 합정의 추적을 받아 항로를 변경하기도 했음. 그러나 당시 강남 1호는 불법무기 선적 의심만 받았을 뿐 실제 불법 무기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는 구체적 제재조치로 연결되지도 않았음.

- 지난 7일에도 인도가 자국 해상에 불법 정박한 북한 선박 'MV 무산호'를 추격 끝에 위협사격을 가해 나포한 적이 있었음. 이는 유엔 결의 후 첫 북한 선박 나포 사례지만, 이 선박에는 불법 무기나 핵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음.
- 하지만 이번 UAE의 무기 압류 조치는 실제 불법무기를 선적한 선박에 대해 검색을 실시해 불법 무기를 확인하고 이를 안보리에 통보, 결의 1874호의 의심 선박에 대해 공해상에서도 기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즉각 안보리 제재위에 통보토록 규정한 조치를 그대로 이행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음.
-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는 “수주일 전에 북한 선박이 UAE에 의해 억류됐으며, 선박에는 금수 품목인 로켓 추진 폭탄 등이 선적돼 있었고, 이 무기들의 포장에는 ‘기계 부품’이라는 가짜 라벨이 붙어 있었다”고 보도했음. 그러나 유엔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수주 전에 억류됐던 선박은 바하마 국적의 호주 선박이며 컨테이너에는 뇌관과 탄약, 여러 기종의 폭탄들이 선적돼 있었고, 해당 선박과 선원은 돌려보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박근혜, IAEA 사무차장과 북핵 논의(8/29)

-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로 유럽을 방문 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8일(현지시각) 오후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올리 하이노넨 사무차장과 만나 북핵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박 전 대표는 하이노넨 사무차장으로부터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비롯해 지난 4월 이후 IAEA와 협력을 중단하고 사찰반을 철수시킨 이후 북한의 움직임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음. 박 전 대표는 “북유럽의 핵감축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북한이 핵 불능화를 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돼야 불능화가 된 것으로 보느냐”고 말했다고 면담에 참석한 유정복 의원이 전했다.
- 그는 또 “한국도 IAEA 창설 멤버로서 참여하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IAEA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음. 이에 대해 하이노넨 사무차장은 “북유럽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핵과학자를) 다른 활동에 참여시켜야 한다”며 “북한의 경우 기초과학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음. 하이노넨 사무차장은 또 “북한의 핵



을 불능화하려면 플루토늄 생산시설과 핵관련 부품, 핵개발 노하우의 불능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게 모두 불능화가 돼야 핵포기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알려주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박 전 대표는 IAEA 방문 직후 EU의 외교장관 격인 베니타 페레로-발트너 대외정책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협력을 주문했음.

● 골드버그 “안보리 대북제재 효력 계속”(8/26)

- 일본을 방문 중인 필립 골드버그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6일 구속 미국인 여기자 석방 등 북한의 강경자세 변화 움직임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의 효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힘. 그는 이날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해 앞으로도 대북 제재를 통한 국제적 압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
- 골드버그 조정관은 “긴장 완화를 도모하고, 비핵화 실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겨냥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비핵화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한 협의”라고 말해 북한의 표면적인 변화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6자회담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힘. 그는 사이키 국장과의 회담에서 앞으로도 양국이 연대해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를 실시해 나가자고 합의함.

● “금강산·개성관광, 유엔결의와 무관”(8/24)

- 필립 골드버그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4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합의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활성화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무관하다고 밝힘.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날 오전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리 결의 1874호도 인도주의, 개발 목적 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금강산이나 개성관광, 개성공단 등도 현재로서는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다는 게 내 평가”라고 말함.
- 그는 이어 오 준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오찬 협의에서도 “안보리 결의 1874호는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것”이라며 “금강산·개성관광이나 개성공단은 이와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고위 외교당국자는 전함. 이 자리에서 골드버그 조정관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유화적 제스처에 대해 “안보리 제재의 이행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규정한 뒤 안보리 결의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제재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강조



했다고 이 당국자는 소개함.

- 골드버그 조정관은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의 달성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것이 안보리 결의의 목적”이라며 “핵개발 등과 관련한 북한 기업·기관에 대한 금융 제재를 비롯한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말함. 그는 또 ‘북·미 양자대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북·미 대화가 앞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양자대화가 있더라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아직 바라는 것”이라고 답함.

나. 미·북 관계

● “北정부관계자 이달중순 비밀리에 방미”(8/28)

- 북한의 대외 유화적 제스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정부 인사 4명이 이달 중순 미국을 비밀리에 방문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들의 방문은 조(북)·미 민간교류협회(KAPES) 대표단이라는 민간 차원의 방미 형식으로 지난 15-19일 이뤄졌던 것으로 전함.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핵실험 이후 북한 인사들의 미국 방문을 처음 허용함으로써 향후 북·미관계 개선 여부와 관련해 주목됨.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민간 초청으로 북한 인사들이 최근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들은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대북지원 관계자 등과 만났다”고 전함.
- 이 소식통은 “이들의 방미는 미국 정부의 초청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방미 대표단은 모두 북한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미국 정부로부터 비자를 받았다”고 말함. 방미 대표단에는 최일 조미 민간교류협회 부회장과 협회소속 고위 관료, 통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도 이들의 방미 일정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짐. 구체적인 방미 목적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북 식량지원 재개 등의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대표단은 방미 기간인 지난 1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오퍼레이션USA’를 비롯한 미국의 구호단체 관계자들과 만났으며, 특히 오퍼레이션USA의 식량, 의약품 저장 창고 등도 둘러본 것으로 알려져 대북 식량지원 재개 여부가 주목됨.
- 이번 북한 대표단의 방미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초 방북, 한국계 유나 리를 포함한 미국 국적 여기자 2명의 석방 교섭을 벌인 직후 이뤄진 것으로 두 사안의 상관 여부가 주목됨. 이와 관련, 미국이 여기자 석방의 대가로 민간 채널을 통해 식량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앞서 북한은 북·미관계가 악화되자 지난 3월 미국의 식량지원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통보하면서 식량 배급지원과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의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에게 철수를 요구함.



- 외교 소식통은 “북 대표단의 방미 기간에 미국 정부와 이들간의 직접 접촉은 없었다”면서 “말은 민간 교류지만, 미국이 북한을 조금 풀어주려는 것 같다”고 말함. 한편 북한 대표단은 방미 기간에 국제 구호단체인 월드비전과도 만나 어린이들을 위한 두유 공급, 밀가루와 콩 지원 등의 사업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으며, 황해북도에서 이동식 식수 공급사업도 시작키로 합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함.

● <북·미대화 성사 가를 3대 변수>(8/27)

- 북한의 최근 잇단 대외 유화적 제스처는 북·미간 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식 ‘평화 공세’로 분석할 수 있음.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화해 손짓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미간 대화 재개는 시간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음. 다만 북·미대화가 재개되더라도 1회성으로 그칠지 연속적으로 될지, 또 언제 어떤 식으로 대화가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림.
- ◇대화 형식 =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미국은 6자회담 틀 내의 양자협상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임. 다만 미국은 최근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약속한다면 그 이전이라도 북한과 양자협상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북·미간 대화 형식을 둔 대립은 쉽게 해소될 문제는 아니지만, 넘지 못할 산도 아니라는 분석이 많음. 북·미간 직접 협상, 순수한 6자회담, 변형된 6자회담이라는 3가지 범주 중 하나로 대화는 시작될 수밖에 없음. 이 중 북·미 양자가 각각 명분을 찾을 수 있는 변형된 6자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북·미 대화 또는 북·미·중 3자대화를 거친 뒤 6자회담 또는 북한을 제외한 5자 모임 후속회담을 여는 ‘2+5’, ‘3+5’ 회담 가능성도 이 때문에 거론되고 있음.
- ◇대화의 출발점 = 북·미간 대화가 재개되기까지는 대화 형식 뿐 아니라 대화의 출발점에 대한 북·미간 이견이 해소돼야 함. 미국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있는 비핵화 조치 이행을 대화재개의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음. 북한이 파기한 영변 불능화 조치 합의를 다시 취하는 것이 대화 시작의 조건이라는 것임. 다만 최근에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는 ‘정치적 약속’만 있으면 북한의 조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을 완화함. 하지만 북한은 영변 핵불능화 조치부터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나올 공산이 큼. 다만 대화 시작 과정에서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중단, IAEA(국제원자력기구) 감시단 복귀 등 ‘핵활동 동결’ 카드를 대화 재개의 선물로 준비할 수 있음. 결국 북한은 영변 불능화 조치 이행부터 협상하자고 나올 것이고, 미국은 영변 핵불능화 이후 북한의 근본적인 비핵화 조치와 검증 문제를 첫 협상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면 접점 마련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미국 내 정치상황 = 미국 내 정치상황은 북·미대화 재개의 또 다른 변수임. 오바마 대통령이 사력을 다해 추진중인 건강보험 개혁 문제가 압초에 부딪히고,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상황이 악화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북·미대화를 국내 정치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 대북 강경책을 유지해 오던 조지 부시 전 행정부도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뒤 급격히 대북 정책을 완화시켰고, 결국 테러지원국 해제를 포함한 대북 유화책을 임기 말 구사함.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26일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해 이런 세가지 변수들을 잘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최근 북한의 평화 공세는 북·미간 대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봐야 한다”고 말함.

● “北에 ‘중간지위’ 허용으로 교착타개를” <美전문가> (8/27)

-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되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핵보유국과 비핵국가 사이의 중간 지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미국 조지메이슨대학의 휴 거스터슨 교수가 ‘핵과 학자협회지’ 최근호에 기고한 논문에서 주장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전함.
- 거스터슨 교수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느냐, 비핵국가가 되느냐 사이엔 중간 지점이란 없다”는 최근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이같이 말하고 미국 정부의 공식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이지만 현재 오바마 행정부내에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리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함.
- 그는 북한 핵문제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창의적’ 방안으로 ▲북한이 현재 가진 소량의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게 하되 엄격한 국제적 안전조치 아래 추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의 생산능력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북한이 현재 가진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되 향후 핵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플루토늄은 비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제시함.
- 그는 또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하되 핵무기를 실은 미사일을 해외 목표 지점을 대상으로 시험 발사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방안과 ▲북한 핵무기의 주요 부품을 제3자의 안전조치 아래 관리하는 방안도 내놓음. 이에 대해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미국 행정부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일축했으나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이달 초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완벽한 폐기보다는 핵기술의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보도했었다고 RFA는 지적함.



● <美 전문가의 對北 대응 7가지 충고> (8/26)

- 북한의 최근 유화 제스처에 미국이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다루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7가지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25일 제기됨. 미국의 싱크탱크인 케이트(CATO)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은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통해 북한의 잇단 유화 제스처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미국 외교의 반복되는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조언함.
- 그는 우선 “기대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함. 외교적 진전을 거둘 수도 있지만 북한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좌절을 낳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한과 대화를 하라”고 조언함. 김정일 정권은 보상을 받을 이유가 없지만,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초등학생의 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그는 “미국은 양자와 다자 논의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함.
- 또 “완벽을 추구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세번째 유념해야 할 점으로 꼽음. 한반도 비핵화는 가치있는 목표이지만 “핵 동결이 단기적으로는 더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임.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을 진부한 것으로 치부하라”고 제언함. 북한이 나쁜 행동을 할 때는 무시하거나 벌을 주고, 긍정적 행동을 했을 때는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다섯째로는 “한국, 중국 등 북한 문제에 가장 큰 이해가 달린 주변국이 이 문제를 이끌어가도록 하라”고 촉구함. 이 밖에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 협조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 난민 수용 등의 비용을 분담하고, 한반도를 영구적 미군 주둔지로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조언함. 아울러 그는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침. 주한미군 2만8천명이 사실상 ‘핵 인질’이 돼 있다면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중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호도 될 것이라고 주장함.

● “北 화해 제스처에 美 태도 아직 불변” (8/24)

- 몇 달 전만 해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강경책을 구사해온 북한이 최근 갑자기 일련의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나선 것은 전통적 후원자였던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예기치 않은 난관에 봉착한 때문이라고 한반도 전문가들이 분석함. 이들 전문가는 북한의 태도 변화는 미국의 강경입장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며 따라서 미국은 기존의 단호한 대북 정책을 고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전술적 변화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함. 국제정치 컨설팅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에이브러햄 김은 북한이 그들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



켰던 본질적 문제인 핵확산 문제는 아직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들은 사태가 잘 풀릴 것이라는 분위기만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실제로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함.

- 미 정부의 한 고위관리도 북한의 행동과 어조 등에 일부 유화적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 정부는 현재로선 북한의 새로운 외교적 제스처에 대해 단지 초기적인 평가만 내린 상태라고 전함. 이 관리는 미국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이 과연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가 있는지라며, 그러나 아직 이를 뒷받침할 어떤 징후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는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을 희석시키고 동맹들 간에 이견을 유발시켜 국제제재의 효력을 저해하려는데 있다고 지적함. 클링너 연구원은 또 북한의 제스처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후원자였으나 최근 유엔의 제재를 지지하는 등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중국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음. 그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 때 북한이 조문단을 파견한 것은 일반의 여론을 이용해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대북 정책을 완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함.
- 미 정부의 대북 특사를 역임한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북한이 예상보다 강경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전쟁위협에 굴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와 유엔의 제재라는 톱니에 물려있으면서 전통적으로 미국과 한국 간의 '간격'을 이용해 온 북한에 이는 예기치 못한 것이라고 지적함.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이 당장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해 타개에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함.
- 클링너를 비롯한 이들 한반도 전문가들은 결국 미국이 지금까지 취해 온 단호한 대북 정책을 고수해야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나선 것은 이들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함.

● 美 전문가들 “제재효력..북·미대화 가능할 듯”(8/24)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4일 북한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조문사절로 파견한 김기남을 통해 김정일의 메시지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등 대남, 대미 화해 제스처를 최근 잇달아 펼치고 있는데 대해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하며 북·미 양자대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데니 로이 하와이대 동서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잇단 화해 제스처의 배경과 관련, “대북 제재들이 작동한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밝힘. 그는 “먼저 위기를 조성한 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미국이나 한국의 양보를 제안하는 북한의 익숙한 패턴으로 되돌아 온 것 같다”고 최근 상황을 분석하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양보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



고 말함.

- 그는 “미국은 이미 구입한 것을 다시 사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북한을 2005년의 비핵화 합의로 되돌아오게 하는데 추가 양보를 하지 않을 것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북·미간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미 대화는 가능하다”면서 “미국은 6자회담의 맥락 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과 양자 대화를 가질 수 있다”고 전망함.
- 하지만 그는 “문제는 이 대화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느냐 여부”라면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재약속하기까지는 제재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함. 그는 “제재를 중단하면 핵무기 포기를 검토할 것이라는 제안을 북한이 할 수도 있고, 좀 더 밀어붙이면 일부 비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실행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그는 “북한도 (건강보험 개혁 등) 다른 많은 것에 힘이 분산된 미국의 새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지적함.
-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별도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 이행을 재약속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북·미간 대화가 이뤄질 기반은 있다”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전망함. 이와 관련, 그는 “결국에는 양자나 지역 문제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일환으로 다루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또 최근 북한의 잇단 긴장완화 조치 배경에 대해 “김정일이 지금은 위기가 통제불능이 아니라는 점을 확신시키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듯 하다”고 분석함. 그는 하지만 “김정일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진지하게 나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김정일의 언급은 명백히 없다”고 덧붙였음.

다. 중·북 관계

● 中 방송사, 北 영상물 제작했다 혼쫓(8/30)

- 중국 상하이미디어그룹(SMG)이 북한 사회를 조망하는 영상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영했다 북한측으로부터 체제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켰다는 항의를 받고 곤경에 빠졌음. 지난 7월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SMG이 북한측의 분노를 사 회사 경영진과 주요 간부들이 해임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30일 중국 언론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음.
- 중국 관영 중앙(CC)TV에 이어 중국 제 2의 언론 그룹인 SMG는 다큐멘터리 채널을 통해 지난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북한 직접 들여다보기’라는 제목의 영상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음. 이에 앞서 SMG 제작진은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지난 6월 열흘 가량 북한에 머물면서 촬영을 했음.



- 그러나 북한 당국은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이후 “SMG가 북한사회의 어두운 면을 강조했다”고 비판한 뒤 외교채널을 통해 베이징 당국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전했다. 북한이 문제로 삼은 영상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150일 전투’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 4월 20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150일간 대중 노력 동원운동인 150일 전투 운동을 펼치고 있음.
 - 서방세계 일각에선 북한이 권력승계를 앞두고 체제안정을 다지기 위해 대대적인 대중동원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북한측의 항의를 받은 베이징 언론 당국은 이달 초 리루이강(黎瑞剛) 총재를 포함해 경영진과 간부진들을 베이징으로 소환해 다큐멘터리 제작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SMG 관계자는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 지 누구도 모른다”면서 “그룹 내부에는 최소한 다큐멘터리 채널을 책임지는 경영진이 해임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상하이시 선전부 관계자도 이번 사안에 대해 확인을 한 뒤 “이번 일은 정치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 지난 2004년 베이징의 정치·경제관련 잡지인 ‘전략과 관리’라는 잡지는 북한의 권위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폐간된 바 있음.
- 中 “北 준수시 제재중단·해제 검토해야”(8/28)
-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874호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과정이 북한의 정상적인 대외관계를 해쳐서는 안되며, 북한이 이 결의를 준수할 경우 제재의 “일시적인 중단이나 해제”를 검토할 것을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28일 보도함. 중국은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에 최근 제출한 ‘1874호 이행 국가보고서’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와 제재위원회의 관련 결정을 정확하고 진지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중국도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힘.
 - 중국은 그러나 “안보리 결의 이행이 북한의 국가 발전이나 정상적인 대외 접촉, 북한 일반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북한의 다른 나라들과의 정상적인 대외관계를 해쳐서도 안된다”고 강조함. 또 “제재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확대해서는 안되며 군사력에 대한 의존이나 군사력 사용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특히 “만일 북한이 대북 결의 규정을 준수할 경우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일시적인 중단이나 해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함.



● <中언론, '김정일 가계(家系)' 집중 보도>(8/27)

- 중국 언론매체들이 신비에 싸인 북한 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부인과 자녀를 자세히 소개하는 장문의 기사를 잇따라 보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인터넷 판인 인민망(人民網)은 지난 20일 '북한최고가문의 비밀을 밝힌다: 김정일과 그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부인들과 자녀들을 소개함.
- 이 기사는 특히 모두 스위스 등에서 유학을 한 김 위원장의 3명의 아들중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성격과 능력을 비교함. 앞서 중국 외교부 산하의 세계지식출판사가 격주로 발행하는 '세계지식'은 지난 7월1일 발간한 13호에 북한 특집을 마련, '북한, 대국사이에 끼여 지금까지 걸어왔다', '김일성 일대기', '김정일: 여전히 신비한 최고지도자', '신비한 조선최고의 가문' 등 4개의 기사를 실었음.
- 인민망의 기사와 세계지식의 특집은 주로 지금까지 나온 북한의 선전물과 한국·일본 언론의 북한 보도내용을 종합한 것이지만 북한 권력 후계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분석을 실었음. 인민망에 따르면 김위원장의 후계자는 아직 오리무중이기는 하지만 나이나 경험 등 여러 면에서 장남 김정남(38)이 동생들인 정철(28), 정운(26)에 비해 유력함. 김정남은 지난 2001년 5월 위조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하려다 적발된후 위신이 깎여 추락하는 듯 했으나 자신을 견제하던 계모 고영희(56)의 사망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임.
- 김정남은 당 호위총국의 요직도 거쳤고 컴퓨터와 IT산업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감각이 탁월하고 국제정세에도 밝다는 것임. 김정남과 정철, 정운은 지난 3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모두 대의원에 오르지 않았지만 모두 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언젠가지 대권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인민망은 내다봄. 김정남은 노동당 중앙재정경리부부장으로 당의 '돈줄'을 쥐고 있고, 정철은 당중앙 국가보위부 부부장으로 정보를 장악하면서 우주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음.
- 또 최근들어 후계자 설이 나도는 정운은 군수공업을 총괄하는 당중앙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내 공업생산과 외화획득에 주력하고 있음. 김정일 위원장은 아직 나이가 어린 자식들에게 권력을 승계하지 않고 매제인 당 행정부장 장성택을 중심으로 집단체제를 구축한 뒤 아들 모두나 그중 한명을 집단체제에 끼도록 할 구상이라는 추측도 있다고 인민망은 소개함. 주목할 만한 것은 정남·정철·정운과 배다른 여자 형제인 설송(雪松)이 김위원장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며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임.
- 세계지식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정남을 낳은 성혜림(37년생. 2002년 5월 사망), 정철·정운의 어머니인 고영희(53년생. 2004년 사망)이외에 다른 배우자가 있었음. 첫 부인은 최고인민회의 대의



원을 지낸 홍일천과 김일성 사무실 타자수를 지낸 김영숙이란 추측이 엇갈림. 한편 세계지식에 따르면 김일성주석이 사망한 것은 1994년 7월8일 묘향산 별장에서 옛 빨치산 전우인 조명선(趙明選) 상장(대장)의 부고 소식을 보고받고 충격으로 심장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임.

- 또 김정일 위원장은 어릴 적부터 김일성의 사랑을 받는 법을 잘 알고 있는 신동으로 관찰력과 분석력이 뛰어나며 담대함까지 갖춰 일찌감치 후계자로 내정됐고, 본인도 어려서부터 스스로 후계자 수업을 해왔다고 세계지식은 씬. 김일성 주석도 김정일 위원장 생모인 김정숙, 김성애 이외에 다른 부인이 있었다고 세계지식은 전함. 1914년 강원도에서 태어난 한성희는 유년 시절 중국 동북지방으로 이주해 김일성이 조직한 공산주의 독서그룹에 참여를 계기로 김일성의 항일 유격활동에 참여했고 1937년 김일성과 결혼함. 한성희는 일본군에 잡혀 항일운동 포기를 다짐하고 석방된 후 한 농부와 재혼함.

● 北, 中 단동에 영사지부 정식 개설(8/26)

- 북한이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의 단둥(丹東)에 주선양(瀋陽) 단둥 영사지부를 정식 개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감. 단둥 지아디(佳地)광장 A와 21층에 마련된 북한의 단둥 영사지부에는 영사급을 포함, 2명이 배치돼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 단둥 영사지부는 그동안 선양에서 처리했던 단둥지역 비자 발급 업무 등을 맡게 됨.
- 북한은 중국 당국에 꾸준히 요청, 지난해 말 영사지부 설립 승인을 받은 뒤 직원 1명을 단동에 상주시키며 영사지부 개설을 준비해옴. 규모는 작지만 단동에 외국의 공식 외교 공관이 들어선 것은 북한 영사지부가 처음임.
- 연간 20여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중간 교역물자의 70% 이상이 오가는 단둥은 북한의 전략적 대외무역 요충지임. 특히 핵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이후 올 상반기 대중국 수출 및 수입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78%와 550% 증가하는 등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북한이 단둥 영사지부를 개설한 이유는 대중국 무역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다 중국 정부의 북한 변경관광 재허용 방침에 따라 단둥지역 관광비자 발급 업무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라. 일·북 관계

● <日 정권교체> 北, 대일접근 가속화 가능성(8/30)

- 일본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따라 북일관계도 해빙기를 맞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음. 일본 정치의 보수적 성격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집권으로 북일관계가 급진전할 가능성이 크지 않



- 지만 민주당이 대외정책에서 보다 유연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임.
-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은 주일 특파원과 간담회에서 “납치문제, 핵, 미사일 문제는 6자회담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도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와 타협을 하기 위한 제재”라고 말했다.
 - 미국의 대북전문가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는 북한에 큰 외교적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일본은 다소 온건한 대북정책으로 선회할 공산이 있다”고 전망했음. 북한도 선거 직후 관망기를 거쳐 적극적으로 일본과 외교적 교섭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
 - 청구권 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일본과 관계개선이 절실한 북한은 그동안 일본과 국교정상화 논의에 적극성을 보여왔음. 겉으로는 항상 일본 정부의 대북자세에 대해 갖은 험담을 쏟아내면서도 북일간의 국교정상화 교섭을 가져온 것도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반영한 것임.
 - 한 대북소식통은 “현재 북일간에 대화가 없지만 북한과 일본의 외무성 간에는 채널이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이라며 “일본에서 보다 유연한 민주당 정권의 출범은 북한이 일본과 교섭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퀴노네스 박사는 “북한과 일본이 막후채널을 가동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막후채널은 외무성 공식채널이 아니라 비공식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무슨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연락 업무를 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북일간에는 2008년 8월 후쿠다 정부 때 중국 선양에서 국교정상화 실무그룹회의를 갖고 납치문제 재조사에 합의한 이후 공식적인 대화는 끊겨있는 상황임.

마. 기타

● 남북, 9월26일-10월1일 상봉 합의(8/28)

- 남북은 28일 끝난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추석 상봉행사를 내달 26일부터 10월1일까지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함으로써 지난 2007년 10월이래 중단됐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년만에 재개되게 됐다.
-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발표한 합의서에서 또 제2항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 등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앞으로 적십자회담을 계속 개최할 것임을 시사했음.



-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의 “새로운 해결” 방식과 추가 상봉 문제를 합의문에 명시할 것을 주장했으나 북측이 이번 회담은 “추석 상봉에 국한”된 것이라며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이들 문제는 합의문에 담기지 못했다. 이에 대해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주로 한 것이어서 국군포로 문제 등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유연한 입장을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남측은 회담에서 ▲이산가족 교류사업은 어떠한 정치적 사안에도 불구하고 추진돼야 한다는 인도주의 존중 원칙 ▲전면적 생사확인·상시 상봉·영상편지 교환·고향방문 등으로 일회성 상봉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추구하자는 원칙 ▲남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상호협력의 원칙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3대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회담들에서도 이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합의서에 따르면, 9월26~28일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이 금강산에 가서 북측 가족 약 200명과 만나고, 이어 9월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이 금강산에서 약 450명가량의 남측 가족과 만나게 될.

● “남북관계 개선 조짐 뚜렷” <中언론>(8/27)

- 중국 언론들이 최근 남북관계 개선의 조짐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함.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중국청년보, 국제뉴스 전문지 세계시식 등 주요 언론들은 2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북한의 ‘조문 외교’를 전후해 남북관계의 개선 조짐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 인민일보는 27일 ‘남북관계에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서울을 찾은 북한 조문단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는 등 이른바 ‘조문 외교’가 단절됐던 남북 정부간의 대화를 복원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함.
- 신문은 “한국 각계에서 조문단의 방한이 남북관계의 개선에 희망을 가져다 줬다고 대체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남북은 공식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민간 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함. 신문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남북 민간교류는 제재 압력을 완화하고 남북 정부간의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 중국청년보도 27일 ‘조문외교 이후 남북관계에 화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방한한 북측 조문단은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해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함. 이후 한국 통일부는 25일 브리핑에서 북측이 작년 11월 이후 단절한 판문점 남북 당국간 직통전화 채널(적십자



채널)이 이날을 기해 복원됐다고 발표함. 또 남북은 26일부터 28일 까지 금강산에서 2년동안 열리지 않았던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있음.

- 국제뉴스 전문 격주간지 세계지식도 9월 1일자 최신호에서 ‘한반도에 화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란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함. 치화이가 오(祁懷高) 푸단대 국제관계학원 연구원이 쓴 기고문은 잇따른 북한의 화해 제스처와 이를 바라보는 한국, 미국의 시각을 분석함. 치 연구원은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북한과 미국은 강도높은 혈투기 ‘말싸움’을 벌였으나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는 등 화해 분위기 조성을 주도했다고 평가함. 미국 역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개인자격’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클린턴은 방북 후 오바마를 직접 만나 북한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대북 정책을 논의하는 등 사실상의 특사 역할을 수행했다고 분석함.
- 그는 “장기적으로 6자회담은 상하이협력기구(SCO)처럼 상설화를 추진해 정상회담, 총리회담, 장관급 회담, 전문분야 회담 등 각종 채널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몽골과 아세안, 유럽연합 등 다른 국가들을 참가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함. 남북간 화해 분위기에 주목하는 것이 중국 언론의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일부 반대되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음.

● “러’ 北 핵·미사일실험 대비 방공망 배치”(8/26)

-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실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실험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대비, 극동 지역에 최신 방공망을 배치했다고 니콜라이 마카로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26일 밝힘.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 중인 마카로프 총참모장은 “우리는 그 곳(극동 지역)에 S-400 사단을 두고 있다”면서 북한 국경 인근에 최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한 상태라고 확인함.

● 濠보고서 “北-미얀마 핵협력 물증 부족”<RFA>(8/26)

- 북한과 미얀마간 핵협력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물증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호주 정부산하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가 보고서에서 지적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함. 이 연구소는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표적인 불량국가인 북한과 미얀마가 군사협력을 강화해온 사실은 분명하지만 양국간 협력이 핵 개발까지 이르렀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말함.
- 보고서는 “북한이 미얀마에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고 군관련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온 사실은 확실하나 과연 비밀리에 미얀마를 도와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했는지는 분명치 않다(not clear)”고 덧붙였다. 또 미국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표한 북



한경제 보고서에서 100달러짜리 정교한 위조지폐를 일컫는 슈퍼노트를 북한이 제작·유통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지만 북한이 제작에 개입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 보고서는 “북한이 위조지폐 활동을 통해 연간 미화 1천5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 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되고, 위조지폐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이 보고서를 작성한 딕 낸토 박사는 최근 “달러화를 위조하는 데 사용하는 인쇄장비, 종이, 잉크의 가격이 워낙 비싼 데다 현재 북한이 가진 장비는 낡아서 북한을 위조지폐 제작의 장본인으로 지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RFA는 덧붙였다.

● “北, 결국 돈 때문에 입장 바꿔” <英신문>(8/24)

-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유연한 자세로 돌아선 것은 결국 돈 때문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24일 주장함. 이 신문은 분석기사를 통해 “북한 노동당 고위 관계자로 이뤄진 6명의 특사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며 “북한은 오랫동안 파산상태에 있었으며 이 대통령 취임 이전처럼 재정 및 식량지원을 받기 위해 남한의 호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도함.
- 북한이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또 다른 이유로 북한 정권 내부의 역학변화를 꼽을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함. 이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로켓을 발사하고 핵탄두 실험을 하며 그동안 비위를 맞추려했던 강경파들을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석함. 막내아들 김정운의 후계 계획이 잘 진행돼 지금까지의 군사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외교관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임. 더 타임스는 그러나 “북한이 세계를 상대로 예측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전략일 수도 있다”며 “손에 약한 패를 쥐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예측불가능성이 에이스에 가장 가까운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보즈워스 내달초 순방..핵심당국자 대동”(8/30)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성 김 6자회담 특사를 포함해 백악관과 국무부 등 관련부서 핵심당국자들과 함께 다음달 초 한국과 일본, 중국 등 관련국을 순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은 보즈워스 일행의 이번 순방을 통해 최근 잇따라 평화공세를 펴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형식, 그리고 포괄적 패키지에 담을 내용 등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음.



- 특히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비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조건으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최근 미국은 물론 한국 등 관련국 내부에서 미묘한 변화가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됨.
- 북핵 현안에 정통한 한 고위소식통은 30일 “미국내 외교일정상 보즈워스 대표가 내달 중순 이전에 순방에 나설 것이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무부 등 관련 부처 핵심당국자들이 함께 올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곧 확정해 미측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어 “최근 북한이 남북대화도 하고 미국과 대화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 미국은 최근 북한과의 대화가 재재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대북 제재를 그대로 유지해나가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른바 대북 대화의 조건인 ‘비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그대로 조건으로 유지해나갈 것인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북한에 6자회담의 복귀선언이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북한 스스로 진정성있는 행위를 하고 관련국들이 이를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대화는 재개되는 것”이라고 말했음.

● 美하원 아태소위원장, 30일 방한(8/29)

- 에니 팔레오마베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이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방한.
- 29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팔레오마베가 위원장은 방한 기간 한승수 국무총리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황진하 의원 등과 만나 한미동맹과 양국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그는 또 다음 달 2일 강원도와 환경부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여는 ‘비무장지대(DMZ) 포럼’에서 기조연설하고 3일에는 전북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음.
- 이어 4일에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 쉼터인 ‘나눔의 집’을 방문, 위안부 생존자들과 면담하며 6일에는 중앙일보가 주관하는 ‘J글로벌포럼’에 참석한 뒤 7일 귀국길에 오름.
- 미국령 사모아 출신의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지난달 전쟁과 여성인권을 주제로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의 유엔 상정을 추진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히는 등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표시해왔음.

● 서울세관-유엔군사령부 MOU 체결(8/26)

-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26일 낮 서울세관 강당에서 유엔군사령부 아시아지역 대표부(비서장 테일러 대령)와 양 기관의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나. 한·일 관계

● <日, 北조문단 이대통령 면담에 '시큰둥'>(8/24)

- 일본 언론은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 조문단의 23일 면담에 대해 대북 제재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등 다소 시큰둥한 시각을 보임.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4일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조문단을 파견해 이 대통령과의 면담까지 실현시켰다”며 “이는 남북 관계의 정체에서 벗어나려는 한국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고,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 포위망에 구멍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북한에 있어서 남북관계 발전은 한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뿐”이라며 “특히 북한이 미국에 이어 한국과 대화에 나선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체제 정비가 순조롭게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은 앞으로 이명박 정권에 대북정책 변경 압력을 강화할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함.
- 아사히(朝日)신문은 “남북관계 냉각에 대한 타개책이 없던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변화’를 성과로 보고, 본격적인 당국 간 협의의 시작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얼마나 진정하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불안도 남아 있다”고 전함. 신문은 “한국 정부 내에서는 대화 공세로 나오는 북한에 대한 경계감도 있다. 6자회담과 남북 간 합의를 몇 번이고 뒤집어 왔던 과거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면담에서 ‘대화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 원칙’을 설명하고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도록 요구했다”고 소개함.
-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도 “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은 지도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국제사회의 ‘제재포위망’에 위기감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이어 “북한이 봄부터 시작한 경제재건 운동인 ‘150일 전투’도 9월 16일에 끝나는 만큼 건강불안설이 여전히 나오는 김 위원장의 후계 선정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이 성과가 될 것”이라고 함.
- 그러면서 신문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북·미협상을 진전시키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며 “갑자기 적극화되고 있는 대화공세가 핵, 미사일 문제 해결로 직결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주장함. 요시다 히로시(吉田博司) 쓰쿠바(筑波)대 교수는 “최근 북한의 대화 공세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효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 한국으로부터 무언가 경제지원을 받아내려는 생각이 투영돼 있다”고 지적함. 그는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곤경에 처해 있는 북한에는 절호의 기회였다”며 “경제지원 요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면담을 거부했어야 했다”고 주장함.
- 요시다 교수는 “북한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북·미 간 협상”이라며 “북한의 북·일협상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 일본도 북한과의 협상 카



드가 없는 만큼,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합심해 대북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한편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북한이 미국에 이어 한국과도 협상에 나설 경우 일본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것을 우려하면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짐.

● 日 관방 “6자회담 통한 북핵 해결 중요”(8/24)

-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의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과의 전날 회담과 관련, “6자회담을 통해 핵 문제 등의 모든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에 있어 의의가 있는 회담이었다”라면서 이같이 말해 이번 회담이 6자 회담으로 이어지길 기대함. 가와무라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일본측 특사로 방한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중의원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한미일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함.

다. 미·중 관계

● 中, 美에 자국연안 정찰활동 중단 요구(8/28)

- 중국 정부는 27일 미국에 대해 자국 연안에서 정찰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함.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군이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공중과 해상 정찰과 관측 활동을 계속하는 게 양측 간 군사적 대결로 이어지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힘. 국방부는 미-중 해상사고를 해결하는 길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정찰과 관측 활동 정책을 변경, 그런 활동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중국 측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난 98년 체결된 미-중 군사협력협정에 따라 베이징에서 열린 이틀간의 양측간 해상안전특별협의 회담 도중 제기됨. 그간 중국은 자국의 EEZ 내에서 외국군의 정찰활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옴. 이에 대해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 수전 스티븐슨 대변인은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확인하며 “미국의 입장은 지난 6월 미셸 플러노이 국방차관이 방중 시 밝힌 것처럼 원하지 않는 사고를 예방하는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유항행할 권리가 있다는 데서 달라진 게 없다”고 밝힘. 올해 들어 중국 주변의 아시아 수역에서 중국 선박과 미군 정찰선이 대치하는 사건이 5차례나 발생함.

● 주중 美대사 “미·중관계 세계에서 가장 중요”(8/27)

- 존 헨츠먼 신임 주중 미국 대사는 26일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함. 헨츠먼 대사는 이날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양국이 기후변화나 에너지, 지



역안보, 세계경제 등의 분야에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지난 21일 베이징으로 부임한 헨츠먼 대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집무실로 나를 불러 미국과 중국이 세계 문제 등 각종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소개함.

- 그는 이어 “이번 대통령 자리는 세계의 도전적인 난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대화를 하고 양국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대사나 외무장관들의 역할이 크다”고 말함. 헨츠먼 대사는 지난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참모로 베이징을 방문했으며 1999년에는 중국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시의 한 야채 시장에 버려져 있던 중국소녀 그레이시 메이를 딸로 입양함.
- 그는 “메이는 미국에서 커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으니 중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나는 내 조국이 임명한 공식 대사이지만 메이는 비공식 대사”라고 말함. 대학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1990년대 초 대만에서 모르몬교 선교사로 활동한 덕분에 중국어에 능통한 헨츠먼 대사는 32살 때 싱가포르 대사를 역임했으며 2005년부터 유타주 주지사를 맡아옴. 헨츠먼 대사는 “대사로서 가장 큰 과업은 항상 양자관계를 최우선시하는 것”이라며 “옆으로 밀려나거나 끊임없이 발전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함. 그는 “미국 의회에 있는 친구들은 물론 전국의 주지사들을 중국으로 초청할 것”이라며 “그들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정한 변화와 힘, 역동성을 현장에서 느껴야만 양국 공동 이익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中-美노조대표, 상호교류 양해각서 체결(8/27)

- 중국과 미국 노동조합 대표들이 2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회동을 갖고 향후 교류와 협력 촉진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함. 왕자오궈(王兆國) 중화전국총공회(ACFTU) 주석은 이날 미국 7개 노조, 600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승리를 위한 변화 연맹(CWF)’의 애나 버거 대표와 만나 독립성, 동등성, 상호존중과 비간섭을 토대로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함. 일주일 일정으로 지난 24일 중국을 방문한 버거 대표 역시 1억 명의 노동자가 가입된 중국 최대 노동단체이자 유일한 노조인 ACFTU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화답함. 지난 10여년 간 반목을 거듭해온 양국 노조는 2007년 5월 버거 대표의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교류를 갖고 있음.

● 美, 중국군과 합동재난구호훈련 추진(8/24)

- 미군은 중국군과 관계 개선을 희망하며 합동 재난구호훈련 계획을 입안할 것이라고 조지 케시 미 육군 참모총장이 24일 밝힘. 아시아 태평양 군 지도자 및 고위 관리들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위해 일



본을 방문 중인 케이시 참모총장은 또 인도주의적 활동이 양국 간 유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지난주 중국군 지도자들과 만나 양국의 미래와 군사 간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좋은 토론을 했다고 밝힌 케이시 참모총장은 당시 중국측이 관계 개선을 위해 제안한 분야 가운데 하나가 인도적 차원의 합동 재난구호훈련이었다면서 귀국하면 중국측이 제안한 것과 같은 훈련 입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함.

-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그러나 지난 20일 이뤄진 케이시 참모총장과 거전평(葛振峰)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과의 만남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함. 관영 신화통신 역시 목격자의 말을 인용, 거 부총참모장은 일본이 중국의 이익을 존중하는 데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케이시 참모총장은 이를 부인했다고 전한 바 있음.

라. 미·일 관계

● “日, 美에 핵밀약 비공개 요구”(8/25)

- 미국과 일본의 핵 반입 밀약의 핵심 부분이 기재된 공문서가 1999년 미국에서 공개됐을 때 일본 정부가 미국측에 공개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익명을 요구한 당시 일본 정부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해 26일 보도함. 양국 간 핵 반입 밀약은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시 일본 국내로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반입할 때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핵무기 탑재 미 함정의 기항과 항공기의 영공 통과 등의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비밀리에 합의했다는 것이나, 정부는 이를 부인해 옴.
- 신문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핵무기를 실은 미국 함선이나 항공기의 일본 기항을 사전 협의 없이 일본이 인정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임. 그러나 일본의 요청 직후 이 문서는 미국 국무성에 의해 재차 기밀문서로 지정됨. 이런 증언은 일본 정부가 핵 반입 밀약의 존재를 국민에게 은폐하려 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핵 밀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일관된 주장의 허구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함.
- 문제의 문서는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전, 핵무기 적재 함선이나 항공기의 기항이나 통과를 인정하는 것을 확인한 1959년의 ‘안보조약토의기록’ 등임. 이는 1960년 6월 미 국무성 동북아시아부가 작성한 ‘의회용 설명자료집’ 내에 포함된 것임. 당시 정부 관계자는 “문서 공개 사실을 파악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곧바로 기밀지정 해제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함. 그러나 이런 내용은 기밀지정 해제를 취소하기 직전인 1999년 11월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이 복사해 감에 따라 일부 언론에 의해 공개된 바 있음.



● 미·일, 대북제재 지속 실시 합의(8/25)

- 북핵 6자회담 일본 측 수석 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외 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방일 중인 필립 골드버그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5일 일본 외무성에서 회동, 앞으로도 연대해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를 실시해 나가자고 합의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함. 두 사람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 이행 방안과 관련,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및 금융거래 감시 강화 등의 조치를 착실하게 이행하면 커다란 제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 골드버그 조정관은 북한이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한국에 조문단을 파견한 것과 관련, “북한이 6자회담에서 약속한 핵 폐기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재차 확인함. 사이키 국장은 현대그룹과 북한이 금강산 관광 등에 합의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관광 자금이 북한에 들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앞으로도 주시할 것”이라고 지적함.

마. 기타

● <日 정권교체> 한·일관계 ‘기상도’ 변화(8/30)

-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일본 총선의 결과가 향후 한·일관계 기상에 어떤 영향을 몰고올 지 주목됨. 이번 선거결과는 ‘보수’에서 ‘진보’로의 일본 정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하고 있어 대외정책 기조에도 궤도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게 외교가의 일반적 관측임. 이에 따라 지난 54년간 자민당 정권하에서 고착화돼온 한·일관계도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음. 변화의 방향은 일단 ‘긍정’쪽임.
- 일단 민주당이 내건 신(新)외교의 중심 키워드는 ‘아시아 중시’임. 미국 주도의 세계화 흐름에서 벗어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역내 협력체제인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구상이 여기서 나왔음. 일본 외교의 기본 축이었던 미·일동맹을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하겠다는 공약도 같은 맥락임.
- 한·일관계는 이런 기조 속에서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규정되고 있음. 새 총리로 유력시되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는 “동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일)양국간 신뢰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공약집은 한 걸음 더 나아가 ▲6자회담 당사국인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한·중·일 3국간 강력한 협력관계 구축을 명기했음.
-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돼왔던 과거사 현안들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점임.
- 8.15 광복절만 되면 논란거리로 떠올랐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경



우 신사를 대신할 새로운 추도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한다는게 민주당의 입장임. 또 위안부를 포함한 전쟁피해자 진상구명을 위해 국회 도서관 내에 항구평화조사국을 만들고 원폭 피폭자들에 대한 새로운 구제인정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음.

- 또 민주당은 이념적 스펙트럼이 상이한 정파들이 모인 정당인 탓에 구조적으로 ‘한지붕 여러가족’이라는 불안한 동거상태에 놓여있음. 주요 대외정책에 대한 내부합의가 어렵고 정권 초기에는 당내 계파간 노선투쟁이 격화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임.
-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가 예정된 점도 민주당의 운신의 폭을 좁혀놓고 있음.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역풍의 가능성이 큰 과거사 문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임.
- 여기에 독도 문제가 여전히 양국관계의 ‘뇌관’으로 남아있음.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영토주권을 갖는 독도”라는 표현을 고집하고 있어 양국간 외교마찰 소지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임. 한 소식통은 “독도 문제에 관한한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음.
- 또 북핵 해법을 둘러싸고 양국이 엇박자를 빚을 개연성도 없지 않아 보임. 일본 민주당은 공약집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진전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임. 다만 일본 새 정권으로서도 북핵 문제의 외교적 민감성을 감안해 미국과 공동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민주당이 내건 공약내용과 현실적 정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새 정권하의 한.일관계는 갈등을 표면화하기보다는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임.
- 특히 새 정권은 교과서나 독도 등 과거사 현안이 돌출하지 않도록 ‘자극적’인 언동을 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한 소식통은 “정국흐름에 따라 돌발성 악재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가급적 갈등을 제어하는 쪽으로 정치력이 발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음.

● 한국-남아공 의회 교류 강화 합의(8/29)

-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대표단은 28일 입법 수도인 케이프타운을 방문, 남아공 국회 템벨라니 넥시 국제관계협력위원장과 양국 의회 차원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 대표단은 이날 케이프타운 의사당에서 이뤄진 넥시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국과 남아공이 기술 및 자원 측면에서 서로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경제적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양국 의회가 이같은 협력 체제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넥시 위원장의 방안을 제안했음.
- 이에 대해 넥시 위원장은 한국이 이룬 경제성장의 노하우와 앞선



기술력을 남아공이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기를 희망한다면 서 양국 국회의장을 매개체로 한 정식 교류를 활성화하자고 화답했음.

- 대표단은 또 한국이 올림픽과 월드컵을 통해 국가 브랜드 제고의 기회로 활용한 점을 강조하면서 남아공도 2010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음.
- 한나라당 김충환·이춘식·이범관 의원, 민주당 문학진 의원으로 구성된 통외통위 대표단은 이날 월드컵 준결승전과 3·4위전, 그리고 예선전이 치러질 케이프타운 그린포인트 경기장 건설현장을 방문, 월드컵 준비 상황을 살펴봤음.

● 연안호 선장 “국민에게 심려 끼쳐 죄송”(8/29)

- 지난달 30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갔다가 북한 경비정에 예인됐던 강원 고성 거진항 선적 ‘800 연안호’의 선원 4명과 선박이 29일 무사히 속초항에 도착했음.
- 연안호와 선원 4명은 이날 오후 5시 고성군 저진 북동방 16마일 지점(북위 38도 37분, 동경 128도 44분) NLL 상에서 북측으로부터 해경 경비정에 인계됐으며 오후 8시25분께 속초항으로 귀환했음. 해경과 해군 함정의 호위를 받으며 속초항에 도착한 연안호 선원들은 동료 선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하선한 뒤 군부대로 옮겨져 월선 경위 등에 대해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음.
- 연안호 선장 박광선(54) 씨는 속초항에 도착해 “정부와 관계 기관 단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빨리 돌아오게끔 성원 해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음. 그는 NLL을 넘어간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관계 조사기관에 충분히 말하겠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음.
- 오징어 채낚기어선 ‘800 연안호(29t급)’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 5분께 GPS(위성항법장치) 고장으로 제진(옛 저진) 동북쪽 37km 상의 NLL을 13km가량 넘어갔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장전항으로 예인됐었음.

● 러시아, OPEC에 회동 제의(8/28)

- 러시아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회동을 제의했다고 세르게이 슈마트코 러시아 에너지장관이 말한 것으로 27일 전해짐. 이타르-타스 통신은 이날 슈마트코가 러시아와 OPEC이 지난해 회동했음을 상기시키면서 “OPEC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접촉을 이번 가을 재개하는데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슈마트코는 지난 6월 러시아가 OPEC에 빈이나 모스크바에서 공동 세미나를 갖도록 제의했다고 말함. 그러나 이후 양측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음. OPEC 역외 최대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는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감산하라는 OPEC의 요구에 주저하는 태도를 취해왔음.



그러나 지난해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수준까지 주저앉으면서 양측의 이해가 보다 접근한 것으로 보임.

● **일본 민주당 정당지지율 39% 사상최고(8/28)**

- 마이니치(毎日) 신문은 28일 지난 26, 27일 이틀간 전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중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4%로 자민당의 21%를 크게 앞섰다고 보도함.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39%를 기록해 사상최대인 전번 7월 조사 때의 36%를 경신함. 자민당 지지율은 약 절반에 상당하는 20%에 머무름.
- 소선거구의 투표 정당비율에서도 민주당은 46%로 자민당의 23%에 비해 두 배나 많았음. 비례대표의 투표 정당으로 민주당과 자민당 외에 다른 정당을 거론한 유권자는 공명당 7%, 공산당 5%, 사민당 국민신당 신당일본 각 1%로 집계됨.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와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 중 누가 차기 총리에 어울릴 것인가는 질문에는 하토야마 대표라는 응답이 31%, 아소 총리는 15%였음.

● **“中, 달라이 라마 대만 방문 사실상 용인” <WSJ>(8/28)**

- 중국 정부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대만 방문에 대해 겉으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에 대한 공격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사실상 달라이 라마의 대만 방문을 용인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8일 보도함. 달라이 라마의 대만 초청은 천취(陳菊) 가오슝(高雄) 시장과 6명의 민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 것으로, 마 총통은 고심 끝에 지난 27일 이를 승인함.
- 달라이 라마는 이에 따라 오는 31일 늦게 대만을 찾아 내달 4일 새벽 떠나게 됐고, 방문기간에 민진당 단체장들의 관할인 태풍 모라꼿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법회를 열고 기자회견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마 총통 측은 총통이 달라이 라마를 만날 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삼가고 있음. 대만 문제를 담당하는 중국의 대만사무판공실은 27일 마 총통이 달라이 라마의 대만 방문을 승인한 지 수 시간 만에 성명을 내고 그의 대만 방문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면서도, 작년 5월 취임한 이래 양안관계 개선에 힘쓰고 있는 마 총통을 공격하진 않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함.
- 성명은 다만 달라이 라마는 “순수한 종교적 인물이 아니지만 나라(중국 본토와 대만)를 분열시키려는 활동을 위해 종교의 깃발을 사용한다”고 덧붙였음. 중국의 이런 입장은, 양안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마 총통이 야당인 민진당측 공격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대만 주민들에게 중국 입장을 무조건 따르지 않는다는 모양새를 내기 위해 고심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음.



종교적이고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위해 초청했다는 민진당 단체장들의 입장을 들어줌으로써 마 총통은 태풍 모라꼳 늑장대처에 따른 지지를 하락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임.

- 전문가들은 특히 달라이 라마의 대만 방문에 대한 마 총통의 승인에 대해 중국측이 직접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중국이 마 총통의 양안관계 개선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힘. 중국 사회과학원의 대만 연구소 연구원인 왕젠밍은 중국 정부도 대만의 태풍 피해민들에게 무관심하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달라이 라마의 대만 방문에) 강력히 반대하기란 쉽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말함. 따라서 중국 측의 ‘용인’속에 이뤄지는 이번 달라이 라마의 대만 방문이 양안관계 개선 무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중국 측 반대입장 성명이 나온 27일, 대만 관리들은 오는 12월에 중국측과 만나 자유무역협정(FTA)와 유사한 협정 체결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고, 또 다른 대만 관리들은 같은 날 중국 자본의 대만 투자 폭을 내년엔 더욱 넓힐 것이라고 말하기도 함.

● <아소 총리 “자민당 몰락 원인은..”>(8/27)

- “우리는 보수주의의 가치(virtues)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 총재인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는 27일 자민당의 몰락 원인을 이같이 분석함. 아소 총리는 이날 오사카 지원 유세 중 “우리는 보수주의의 가치를 분명하게 밝히는 데 실패했다”며 “우리가 지난 몇년간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일본 지지통신을 인용해 보도함.
- 아소 총리는 또 정부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유권자들이 자민당의 국정운영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음을 인정함. 오는 30일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중의원 480개 의석 중 300석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반세기 이상 유지돼온 자민당 1당 지배가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실정임.
- 한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는 이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기고문을 통해 일본은 미국식 세계화에 반대하고 동아시아 통합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하토야마 대표는 ‘일본의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일본은 냉전 이후 세계화란 이름 아래 미국 주도의 시장 만능주의에 끊임없이 시달림을 당해왔다”면서 “글로벌 경제는 전통적인 경제 활동을 망쳤으며 지역 사회를 파괴했다”며 미국식 세계화를 강하게 비판함.
- 하토야마 대표는 이어 “이라크전쟁의 실패와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종말을 맞고 있으며 우리는 다극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함. 하토야마 대표는 또 미국과 떠오르는 슈퍼파워 중



국 사이에서 일본과 아시아 중소국가들이 정치,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국가주의를 극복하고 규칙에 기반한 경제 협력과 안보 틀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하토야마 대표는 특히 “아세안, 일본, 중국(홍콩 포함), 한국, 대만은 전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아시아 통화 통합에 필수적인 영구적인 안보 틀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

● <中 내수회복이 세계 경제 버팀목>(8/27)

-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덮친 후 지난 1년간 중국의 내수경기 회복이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분석됨. 27일 중국 한국대사관이 작성한 ‘중국의 내수회복이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10월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내수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 교역국들의 경제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임.
- 중국은 작년 말 이후 4조위안(728조원) 규모의 경기활성화 정책을 통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한국을 비롯해 호주, 유럽연합(EU), 일본, 브라질, 러시아, 아세안(동남아국가연맹) 등 원자재와 중간재 수출국들이 큰 수혜를 본 것으로 분석됨. 올해 1~7월까지 국가별 대중국 수출금액은 EU가 685억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일본 676억달러, 아세안 537억달러, 한국 530억달러, 대만 425억달러, 미국 413억달러, 호주 210억달러, 브라질 146억달러 등이었음.
- 독일의 중국 수출금액은 294억달러로 EU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말레이시아는 155억달러로 아세안의 중국 수출 28.8%를 점유함. 중국의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이들 국가의 대중국 수출금액은 확대되는 추세임. 중국은 상반기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7.1%를 기록,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규모가 작년 7.5%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20% 가까이 커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교역국들에 대한 영향력도 덩달아 확대됐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중국은 내수경제로 전환하면서 올해 고정자산투자가 33.5%에 달하고 ‘가전하향(家電下鄉)’ ‘이구환신(以舊換新)’ 등의 자동차, 가전업체 지원정책을 실시하며 내수용 자본재와 중간재를 대량으로 수입함. 또 선박수주가 올해 전세계 1위로 올라서며 한국으로부터 선박부품 수입을 크게 늘림. 이에 따라 자본재와 중간재 수출이 많은 독일과 한국, 일본, 대만이 큰 수혜를 보았음. 철광석 등 원자재의 대중국 수출이 많은 호주와 브라질은 4월 이후 대중국 수출금액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경기회복의 상당부분이 중국 덕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세계적인 경기부진으로 원자재 등의 가격이 하락해 중국의 수입금액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철광석, 플라스틱, 동, 고철 등의 수입량은 지난 3월 이후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중간재인 반



도체 기기, 방직제품, 자동데이터처리설비, 하이테크제품 등의 최근 수입 감소율은 연초 대비 2~7%포인트 가량 축소됨. 보고서를 작성한 유광열 한국대사관 재경관은 “중국이 과거 ‘수출증가 → 경제성장 → 수입증가’와는 달리 인프라 투자와 가전, 자동차, 휴대전화 등 소비가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어 교역국에 미치는 영향도 종전과 다르다”면서 “중국의 내수회복이 교역국들의 경제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고 말함.

● “日 내달 15일 새 총리 지명”(8/27)

- 일본 정부와 여당이 8:30 총선 이후 새 총리를 선임할 특별 국회를 9월 15일에 소집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7일 전함. 총선 승리가 확실시되는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는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9월 하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정권교체가 현실화되면 정부, 여당이 이를 배려하기로 한 것임.
- 특별 국회는 헌법 54조의 규정에 따라 중의원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함. 민주당은 신임 총리의 외교 일정을 고려, 내달 15일 소집 예정인 특별 국회에서 총리 지명 및 의장 선출 등을 마무리하고 18일에 새 내각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임.

● <日총선 D-3> 민주 정권인수 준비 착수(8/27)

- 일본 민주당이 사흘 앞으로 임박한 총선에서 압승이 예상되자 국정 운영의 공백을 없애기 위한 정권 인수 준비에 착수함. 민주당은 겉으로는 선거운동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조각과 새로운 조직 설치, 예산 편성 등의 국정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민주당은 30일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바로 31일 정권인수팀을 발족, 조각과 당료 인사를 포함한 정권 구상의 구체화 작업을 시작함.
- ◇ 하토야마 9월 중순 조각..유엔 연설-민주당은 시간에 쫓기고 있음. 집권할 경우 총리가 취임하고 정권을 인수받는 한편 새로운 예산과 정책을 구체화해야하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음. 당장 총리가 급함.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가 9월 14~18일로 예상되는 국회(참의원·중의원)의 총리지명 투표를 거쳐 총리에 취임할 경우 당장 23일 뉴욕에서 유엔총회가 기다리고 있음.
- 민주당은 유엔총회 연설을 하토야마의 글로벌 데뷔전으로 설정하고, 참모들이 현재 연설문 작업을 하고 있음. 이어 9월 24~25일에는 역시 뉴욕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금융정상회의가 기다리고 있고, 10월 초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함. 총리의 일정이나 국회 일정상 조각은 늦어도 9월 18일까지 종료해야 함. 임시국회에서는 국가전략국 등 새로운 조직의 설치관련 법안,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관련 법안, 정치인의 내각 투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급여 삭감을 위한



관련 법안 등의 처리가 산적해 있음.

- ◇ **내년 예산이 급함**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가장 급한 것은 내년 예산임. 자민당 정권이 지금까지 내년 예산 작업을 해왔으나 민주당의 정책에 맞게 전면적으로 손질을 해야함. 일본의 예산편성은 각 성·청이 재무성에 내년 예산요구액을 8월 31일까지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가을에 예산 실사 작업을 벌여 12월 말까지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되고 매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됨.
- 하지만 정권 교체기에 있는 관계로 각 성·청의 예산편성 작업은 진척되지 않고 있음. 민주당이 집권하면 당장 내년부터 지급할 아동수당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현재 예산에서는 염출할 방법이 없음. 아동수당 뿐만 아니라 공립고교의 실질 무상화에 따른 예산을 짜내야하고, 고속도로 무상화에 따라 줄어드는 정부 수입을 보충할 방안도 마련해야 함. 아동수당 등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7조 1천억엔 정도를 염출해야 하지만 이는 다른 예산을 삭감한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함. 세금이나 나랏빚을 늘리지 않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임. 민주당은 연내 예산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아래 집권과 동시에 예산 편성에 총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임.
- ◇ **새정권의 심장 국가전략국 윤곽** 민주당의 정책결정 시스템은 총리를 축으로 산하에 각료운영회의와 행정쇄신회의, 국가전략국을 두는 방식으로 운용됨. 이 가운데 핵심은 예산과 인사, 외교 등을 총괄할 국가전략국임. 30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이며 예산을 민주당 정책공약에 맞게 편성하고 외교의 기본틀을 짜며, 인사를 총괄하게 됨. 국가전략국의 의장은 당연히 각료급으로 총리에 이어 내각의 최고 실력자가 될 전망이다. 국가전략국은 하토야마 대표가 강조해온 정치중심의 정권운영을 위해 국회의원 10명과, 재정·외교·경제전문가, 당 정책조정회의 직원 등이 참여함.
- 또 총리 직속 조직임을 감안해 현재 6명인 총리비서관을 늘려 이들을 국가전략국에 겸임하도록 할 방침임. 민주당은 정치 중심의 정권 운영을 위해 내각의 대신(장관)은 물론 부대신, 정무관 등에 100명의 국회의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며, 부대신과 정무관을 임명할 때는 각료에게 지명권을 부여하기로 함. 하지만 국회의원의 내각 배치를 위해서는 부대신과 정무관의 정원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바꿔야 함.

● 프랑스 “2011년 G8→G14로 확대개편”(8/27)

- 무용론이 제기된 주요 8개국(G8.선진7개국+러시아)을 주요 14개국(G14)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 오는 2011년 G8 의장국을 맡기로 돼 있는 프랑스 정부는 G8에 거대 신흥국들을 포함시켜 G14를 출범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26일 밝힘.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파리에서



열린 해외 공관장 모임에 참석해 “G8을 G14로 개편하려는 구상이 진전을 보고 있다”면서 G8 무용론을 거듭 주장함. 사르코지 대통령은 “2010년 G8 의장국인 캐나다는 이 정상회의를 G14처럼 확대해 주최하고 2011년 의장국인 프랑스는 G8을 G14로 확대개편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中 “60년간 수교국 153개 증가”(8/25)

-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은 건국 60주년 기념일을 앞둔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949년 신중국 건립 초기 수교국은 18개에 불과했으나 60년간 153개국과 수교를 맺어 현재 수교국은 171개에 달한다”고 말함.

● “中 주변국 공군력 강화 우려”<中언론>(8/24)

- 중국 언론이 한국,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들이 최신형 전투기를 배치해 중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주변국들의 군사력 강화에 우려를 표시하고 나섬. 중국 광주일보(廣州日報)는 24일 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이 잇따라 대규모로 신형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어 중국의 해상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우선 말레이시아를 예로 들음. 말레이시아 왕실이 최근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30-MKM 전투기 2대를 구매하는 등 30-MKM 전투기 18대를 구비하기로 했다는 것임. 이 전투기는 말레이시아의 요구에 따라 화력을 보강한 것으로 인도가 구매한 수호이-30MKI와는 크게 다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함.
- 신문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태국 역시 대량으로 수호이-30과 수호이-27을 구매했다고 밝히면서 국경분쟁으로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인도에 특히 주목함. 파키스탄의 군비 증강에 대비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인도가 2015년까지 수호이-30MKI를 230대를 구비하게 돼 중국의 두 배 이상을 갖게 된다고 우려함.
- 중국의 남부 지역을 러시아 무기가 점령했다면 동부의 한국과 일본은 미국 무기의 천하라고 신문은 전함. 미국의 군사전문지 네이비타임스를 인용, 인도와 일본, 한국이 세계 최신티 항공모함용 전투기인 미국의 F-35C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변국의 군비 증강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중국 역시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왕명량(王明亮) 공군지휘학원 교수는 중국신문사와 인터뷰에서 “상공과 우주 공간과 관련된 국가전략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 안전을 수호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함. 왕 교수는 ▲상공의 안전을 수호하고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위기상황을 억제하고 ▲상공에서의 안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주변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비해 중국이 공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침.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 같은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외부 요인을 구실로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견해를 내놓고 있음.

[참고 1] <그래픽>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장소(연합뉴스, 8/28)

-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남북은 28일 끝난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추석 상봉행사를 내달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반종빈 . 장성구 기자 / 20090828

반종빈 기자 bjb@yna.co.kr

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ArticleGraphic/YIBW_showArticleGraphicPopup.aspx?contents_id=GYH20090828000800044



[참고 2] <그래픽> 800연안호 나포 일지(연합뉴스, 8/29)

-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지난달 30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북한에 나포됐던 '800연안호' 선원과 선박이 29일 송환된다. 통일부는 28일 "북한은 오늘 오후 군통신선을 통해 '800 연안호' 선원과 선박을 내일 오후 5시 동해상에서 우리 측에 인도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장성구 기자 sunggu@yna.co.kr

800연안호 나포 일지



7.30 선장 박광선씨를 포함, 선원 4명이 탑승한 29급 오징어 채낚이 어선 '800 연안호(거친 선적)가 오전 5시5분께 GPS(위성항법장치) 고장으로 강원도 체진(옛 저진) 동북쪽 37km 상의 동해 NLL을 13km가량 넘어갔다가 북한 경비정 1척에 의해 나포.

7.31 北, 동해지구 군사실무 책임자 명의로 우리 측 동해지구 군사실무 책임자에게 전통문을 보내 "현재 연안호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선원들(4명)과 연안호 문제가 처리될 것"이라고 밝힘.

8.1 北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해군 경비함이 7월 30일 동해 우리측 영해 깊이 불법침입한 남측 선박 1척을 나포했다. 현재 해당 기관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800 연안호" 나포 사실 보도.

8.6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난 4~5일 방북시) 인도적 건지에서 북측에 억류된 우리 근로자와 연안호 선원이 석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함.

8.7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오늘로 131일째 억류돼 있는 개성공단 근로자와 연안호 선원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힘.

8.17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북한에서 귀환해 '800 연안호' 나포 사건과 관련, "(김 위원장이) 통일부 당국자 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며 "잘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

8.24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이었던 북한의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연안호(송환) 문제는 안전상 절차에 따라 시일이 걸릴 뿐"이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밝힘.

8.28 통일부, 북한의 '800 연안호' 선원, 선박 29일 송환 통보 사실 공개.



장성구 기자 sunggu@yna.co.kr/ 20090828

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ArticleGraphic/YIBW_showArticleGraphicPopup.aspx?contents_id=GYH20090828001100044



[참고 3] <그래픽> 연안호 선박·선원 30일만에 귀환(연합뉴스, 8/29)

-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 = 지난달 30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북한 경비정에 예인됐던 '800 연안호' 선원과 선박이 나포 30일 만인 29일 무사 귀환했다.



전승엽, 김토일 기자 kirin@yna.co.kr / 20090829

전승엽 기자 kirin@yna.co.kr

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ArticleGraphic/YIBW_showArticleGraphicPopup.aspx?contents_id=GYH20090829000300044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